

현 시기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새 세상을 여는 진보정치연구소  
연구보고서 10

## 현 시기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펴낸이 | 진보정치연구소  
지은이 | 차문석, 홍 민  
발행일 | 2007년 4월 20일  
주 소 | (150-748)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7층  
전 화 | 02-786-7464 팩 스 | 02-786-4415  
제 작 |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ISBN 978-89-957908-0-9 93340  
값 10,000원

# 현 시기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연구

차문석 | 홍 민

# 차례

■ 요약 9

■ 서론 위기의 북한 경제 17

■ 제1장 북한의 거시경제 실태 23

1. 예산 및 재정과 무역 실태 23
2. 에너지 문제의 실태 27
3. 공장·기업소의 가동 실태 29

■ 제2장 북한에서의 시장과 시장경제 33

1. 시장과 시장경제의 등장 배경 33
  2. 북한 시장경제의 동학 43
  3. 시장의 교환과 유통 구조 53
  4. 북한 시장경제의 성격 63
- 소결 : 불가역적 과정으로서의 시장경제 72

### ■ 제3장 북한의 시장교환과 주민 경제 생활 79

1. 사회적 교환질서와 사회적 관계 79
2. 시장교환과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 86
3. 현 시기 주민 경제생활과 시장교환 112

### ■ 결론 위기와 도전, 북한 경제의 향방 131

1. 위기와 도전 속의 북한 경제 131
2. 북한 주민 생활의 전망 133

## 표·그림 차례

- 표 1-1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이 18
- 표 1-2 북한의 예산규모 추이 24
- 표 1-3 2006년 현재 북한의 외국무역 25
- 표 1-4 남북한 교역액 26
- 표 3-1 농민시장의 시기별 명칭 및 운영방식 변화 87
- 표 3-2 북한의 통행증 종류와 내용 92
- 표 3-3 북한의 재정수입 구성 94
- 표 3-4 주요 준조세 성격의 고정 상납(1995년 이후) 95
- 표 3-5 중앙당 39호실 산하 기구들과 사업 개요 99
- 표 3-6 중앙당 38호실 산하 기구 및 사업 개요 101
- 표 3-7 군(軍)이 운영하는 무역회사(1996년 이전) 101
- 표 3-8 중하위 관료들의 정치자본을 통한 각종 뇌물 수수 110
- 표 3-9 외부 지원 식량 분배 순위 115
- 
- 그림 1-1 북한 내부 유통 경로의 사례 : 전국 시장의 형성 사례 46
- 그림 1-2 시장관리소의 구조 48
- 그림 1-3 거시적 유통 경로 55
- 그림 1-4 자전거의 유통 경로 57
- 그림 1-5 함경북도 지역의 쌀과 공업품의 유통 58
- 그림 1-6 미시적 유통 구조 : 인조고기 생산 및 유통 사례 59
- 그림 1-7 상인들(돈주 중심)의 유통 : 화폐 ⇒ 상품 ⇒ 화폐 62
- 그림 1-8 일반 인민들의 유통 : 상품 ⇒ 화폐 ⇒ 상품 63
- 그림 3-1 세 가지 교환방식(호혜-재분배-시장)으로 본 북한 85
- 그림 3-2 1990년대 이후 수령경제의 자금경로 104

요약





## 요약

이 연구는 현 시기 북한의 경제가 운용되는 실태를 고찰한다. 크게 북한의 거시경제 실태, 북한의 시장과 시장경제 현황, 그리고 북한에서의 시장 교환과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 경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경제난과 참혹한 기근을 경험했는데, 2006년 12월 현재에도 북한은 그러한 경제난과 기근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 경제가 어떤 상황에 도달해 있으며 사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혀내어 설명하고자 했다. 이러한 경제운용 실태가 조명된다면 향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타진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강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예산 규모는 2000년 96억 달러(204억 원), 2001년 98억 달러(216억 원)였으며 이후로는 자세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최근의 예산 규모를 계산해 보면, 2004년 25억 달러, 2005년, 약 28억 달러였다. 무역 총액도 2005년에는 30억 달러의 수준에 있었으며 2006년 대외무역규모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제재 속에서도 3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2006년 현재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지역에 따라, 군수 민수에 따라, 생산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의 경우, 철강업은 0%, 의류부문은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

\* \* \*

한편 북한은 시장경제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시장경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는 바로 '전국 시장'과 '전국적인 가격 동향'이다. '전국 시장'의 형성은 제도와 비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형성되었다. 가격 동향에서도 전국적인 시장화 경향이 포착된다.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현재 전국시장이 작동함으로써 시장경제가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대다수가 중국산이다.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은 다른데 최소 70%에서 심지어 90% 이상이 중국산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 시기 북한의 시장경제가 갖는 특수성은 첫째, '생산이 없는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즉 물질적 재생산과정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완곡하게 표현하면 단순상품생산이라는 토대조차도 미약하다는 것이

다. 북한 시장경제의 두 번째 특징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경제’에 대한 상부구조적인 제도가 불비(不備)하다는 점이다. 개별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고 생존을 구가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을 시장적으로 통합해 낼 제도적 기제들은 확충되지 못하고 있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 이것은 다시금 전국적인 상품의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북한 시장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시장경제의 세 번째 특징은 외부의 공급원(외국 상품 수입)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부의 생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이는 북한의 시장경제가 국제정치적 사안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북한 시장경제의 네 번째 특징은 상업자본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산업자본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는 현행 북한의 제도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한 생산 없는 시장경제, 산업 없는 시장경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부 공급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의 시장경제의 확산으로 화폐는 새로운 기능을 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의 생활 형태를 바꾸고 있다. 첫째, 배급제도의 붕괴로 인한 생계수단의 확보를 위해서 화폐 확보는 필수적이 되었다(구매력 확보의 불가피성). 둘째, 비의도적인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생존은 시장과 화폐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셋째, 2002년 7.1조치 이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제도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 수납금이 현물이 아닌 화폐로 대체되었으며, 각종 매대와 자릿세 등 세금 형태의 납부금들이 화폐로 대체되었다. 인민들은 이전에는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국가의 도움을 이제

는 화폐를 내야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려면 어찌되었든 화폐를 구해야 한다. 화폐가 사회뿐 아니라 경제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시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은 ‘사회’(시민사회적인 것)와 ‘개인’(주체로서의)을 성립시킨다. 이전의 관료정에서는 ‘실력자’에게 환심을 사야만 되었지만, 이제는 ‘실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다소간 별개였던 타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불가피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소통을 하게 되었다.

\* \* \*

현재 북한에서는 계획-재분배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시장교환이 확대되었고 시장 의존적인 삶이 일반화되었다. 여기에 주민들의 경제심성 역시 시장 의존적인 삶에 맞게 변화였다. 당·정, 고위·말단을 막론하고 관료들은 시장교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위의 보존에만 열중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기생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계층 간, 지역 간 빈부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고 그럴수록 민심은 현 정권과 지도자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또 근 10년이 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 해체의 상처는 커져만 가고 있으며, 교육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체제의 근간이 될 후속세대의 교육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현 시기 국가의 경제운영 역시 사실상 시장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특권화된 계층의 경우 중앙으로 이전되는 생산물과 자원을 대외교역이라는 시장교환을 통해 자금화하고 있

으며 사회적 재분배의 능력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하위 관료들 역시 자신의 관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기단위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교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공장 및 농장의 각종 자재 및 농기구, 비료 등을 마련하는 기본 통로가 공식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말단 관료들의 경우 주민들의 시장교환에 약탈적으로 기생하며 시장을 자신들의 사적 수취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생존 차원에서부터 적극적인 이윤추구까지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시장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의 공식적인 경제운용은 물론 모든 단위와 계층에서 시장교환이 행위와 사고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거의 15년 간 이루어진 변화로서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현 시기 북한 경제운용에서 시장이 갖는 의미를 인민경제와의 관계 차원에서 정리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외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됨으로써 국가의 주민에 대한 재분배 능력이 지금보다 향상되더라도 사회에 확대된 시장교환의 질서를 돌이키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외부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시장교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의 회귀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장교환을 관리하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국가의 배급 중심적인 인민경제 통제와 운영보다는 시장교환과 인민경제 운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국가 통제 안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 생산부문을 정상화하고 낙후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재정비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안정화 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교환의 확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많아진 사회의 일탈적 현상들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도덕적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기준과 제도적 틀로 수용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영역이 확대된 만큼 이를 일정하게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시장화의 속도와 사회적 변화 속도 등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의 법적·제도적 대응력이 현재는 물론 향후 경제민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로 시장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시장교환을 방해하는 행위나 관행을 다양한 법적 체계를 통해 교통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적 조정은 중단기적으로는 시장 질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목표를 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변수는 시장화를 통해 발생하는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이다. 이 문제는 당분간 국가적 수준에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론

# 위기의 북한 경제







서론  
⋮  
위기의 북한 경제

이 보고서는 현 시기 북한의 경제가 운용되는 실태를 고찰한다. 북한 경제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고난의 행군’이라는 혹독한 경제난과 참혹한 기근을 경험했다. 2006년 12월 현재에도 북한은 그러한 경제난과 기근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북한 경제의 상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경제는 에너지 부족과 원·연료의 부족 등에 의해 공장 및 기업소의 70~80%가 가동을 중지하였다. 1990년대 들어 수년간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주었고, 기존의 계획 경제는 그 기능을 거의 정지하였다. 계획경제가 그 기능을 정지함에 따라 북한의 사회에서는 2차 경제(the second economy)와 암시장이 계획경제의 공백을 채우면서 확산되었다.

곡물 생산량의 경우에도 약간 나아지기는 했으나 수요량이 약 650만 톤임에 비해 2003년 425만 톤, 2005년 431만 톤, 2006년 454만 톤으로 여전히 식량난의 위험 속에 처해 있다.

〈표 1-1〉 북한의 경제 성장률 추이

(단위: %, 만 톤)

연도	'89	'90	'91	'93	'95	'97	'99	'00	'01	'02	'03
경제성장률	2.4	-3.7	-3.5	-4.2	-4.1	-6.3	6.2	1.3	3.7	1.2	1.8
곡물생산량	548.2	402	442.7	388.4	345.1	348.9	422.2	359	394.6	413	425

자료: 통일연구원 『남북한 경제지표 편람』; 한국은행, www.bok.co.kr

이에 북한 지도부는 2002년에 한편으로는 경제를 정상화하려는 목표와 다른 한편으로는 현실을 용인하여 7·1 조치라는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책을 하달함으로써 북한 경제를 다시 가동시키려고 했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월 1일 ‘새로운 경제관리체계’(이하 7·1조치)와 2003년 3월 ‘종합시장 개편 조치’를 통해서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시장질서들을 체제내적인 기제로 만들었다. 하지만 북한에서의 시장(market or marketplace)은 현재 전체 인민들이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기제로서 사회에서 운용됨으로써 북한의 시장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현재 북한은 정치담론 상으로는 수령중심의 유일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 토대 상으로는 ‘시장경제’가 꾸준히 관철되고 있다. 이 시장경제는 매우 ‘기묘한 형태로’ 수령 체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실

정이다.

하지만 공업품의 만성적인 공급부족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는 기존의 소규모 시장들로서는 지탱될 수 없는 상황이며, 외부의 투자도 현 재로선 너무나 제한적이어서 자생적인 경제 토대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는 다시 인민 경제의 만성적인 경제난을 낳고 있으며, 게다가 기근의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경제 현실은 인민들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북한 당국의 정책전환을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 과제는 북한의 경제운용 실태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비판적인 접근을 통해서 북한의 현실 경제가 어떤 상황에 도달해 있으며 사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밝혀내어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제운용 실태가 조명된다면 향후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각도에서의 타진이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의 강구도 가능해질 것이다.



제1장

# 북한의 거시경제 실태





제1장  
⋮  
북한의 거시경제 실태

1. 예산 및 재정과 무역 실태

북한의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1993년 187억 달러였으며 1990년대 중후반의 경우 1997년 91억 달러, 1999년 92억 달러, 2000년 96억 달러(204억 원), 2001년 98억 달러(216억 원)였으며 이후로는 자세한 통계가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05년 4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하는데, 예산 규모의 증감(▲▼) 수준을 발표했다. 이를 근거로 최근의 예산 규모를 계산해 볼 수 있겠다.

2004년도 예산은 25억 달러였으며, 2005년 예산은 3,885억 9천만 원(약 28억 달러)이었다. 2006년 예산은 4,197억 원(29억 3,500만 달러)으로 2001년의 98억 달러에 훨씬 못 미친다. 2006년 예산 수입은

〈표 1-2〉 북한의 예산규모 추이

(억: 북한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예산 규모	204	216	222	·	3,513	3,885	4,197

자료: 한국은행, KIEP; 통일부

중앙예산에서 78.1%, 지방예산에서 21.9%를 충당할 예정이었다.

한편, 2006년도 예산에서 특이한 사항은 예산 항목에서의 새로움이다. 즉 수입항목 증가율로서 고정재산 감가상각금, 부동산 사용료, 재산 판매 및 가격편차 등을 발표했는데, 이는 예전에 없던 수입원들을 포함하여 새로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는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조치) 및 그 후속조치에 따라 북한 경제가 구조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시장 경제에서 많이 사용되는 ‘부동산’, ‘재산 판매’ 등의 용어가 예산 항목에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sup>

무역 총액도 1989-90년에는 약 48억 달러에 달하였으나 이후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1999-2000년에는 1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2002년에 22.6억 달러, 2003년 23.9억 달러, 2004년 28.6억 달러, 2005년에는 30억 달러의 수준에 있다. 그리고 2006년 대외무역규모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제재 속에서도 30억 달러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sup>

1. 통일부, 『2006년 북한경제동향』, 2007년 1월.

2. 통일부, 앞의 자료.



〈표 1-3〉 2006년 현재 북한의 외국무역

(단위: 억 달러)

국가명	중국	태국	EU	러시아	일본
무역 총액	17.00	3.95	2.15	1.40	1.20
무역 수지	-7.64	-0.59	-1.0	-1.12	0.33

주: EU의 경우, 2006년 1-11월; 러시아의 경우, 2006년 1-9월; 일본의 경우, 2006년 1-11월.  
 자료: 통일부; Kita; Kotra; World Trade Atlas; 일본세관

현재 북한이 거래하는 무역 파트너 중에서 단연 1위는 중국이다. 따라서 북-중 교역은 북한의 거시 경제(특히 경제성장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sup>3</sup> 북한의 핵실험은 단기적으로 북-중 교역 중단을 초래할 정도로 결정적인 사태였던 것이다. 북-중 무역 규모는 2006년에 약 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4년과 2005년의 각각 14억 달러와 16억 달러를 약간 상회한 것이며, 무역 총액은 7.5% 증가한 것이지만, 무역 적자는 7억 6,400만 달러를 기록했다.<sup>4</sup>

그리고 핵실험의 여파로 경색될 것으로 생각했던 북-중 교역액은 2007년 1월 현재 15억 3,600만 달러로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 5.42% 증가했다. 특히 석탄, 석유, 석유가스 등 대부분의 연료의 대북 수출이 모두 증가세를 보여 연료 수출 총액은 21.2% 증가했다.<sup>5</sup>

핵실험 이후 태국과의 무역도 크게 증가했는데, 비록 전체적으로

- 
3. 2000-2004년에 북-중 무역의 증가가 북한의 경제성장률을 약 3.5% 상승시켰다고 주장했으며, 조명철은 북-중 무역의 1% 증가는 북한 경제성장률을 0.112%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영훈, “북-중 교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2005); 조명철 외, “북한경제의 대중국 의존도 심화와 한국의 대응방안”(2005).
  4. 통일부, 앞의 자료. 하지만 수출은 전년대비 5.8% 하락한 반면에, 수입은 13.6% 증가했다.
  5. Kotra 북한경제속보, “중국의 대북 주요품목 수출동향”(2007년 1월 10일).

수입이 초과했지만 수출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과 태국은 2006년 핵실험 이후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의 전체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06년 1-12월 남북한 간의 남북 교역은 13억 4,974만 달러로 전년 대비 27.8% 증가하였다.<sup>6</sup>

〈표 1-4〉 남북한 교역액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총교역액	425	403	642	724	697	1,055	1,349

자료: 통일부

한편, 외국의 대북 투자액은 그 성격상 정확한 통계를 알기 힘들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북중 관계의 '종속성'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붐을 이루고 있듯이 대북 투자의 대부분은 중국자본이다. 하지만 북한의 핵 실험 직후에 수년간 활발했던 중국의 대북투자(주로 민간투자)는 지체되었다. 중국 기업의 대북 투자 누계는 2006년 상반기까지 44개 항목에 합의액 2억 1935만 달러, 실제 투자액은 1억 2722만 달러였으며 그 대부분은 2005년과 2006년 상반기에 투자된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이후 모든 것이 변했는데, 북한에 대한 중국기업들의 투자가 일순간에 증지되었다.<sup>8</sup>

6. 통일부, 앞의 자료.

7. 대표적으로는 남성욱, "경제혈맹? 중국자본, 북한점령가속화", 『신동아』 통권 555호 (2005); 남성욱, "중국자본 대북투자 급증의 함의와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18권 1호(2006); 임을출, "중국자본, 북한경제 접수하나", 『한겨레21』 2005년 10월 26일 제 582호 등이 있다.

## 2. 에너지 문제의 실태

고난의 행군 이후의 북한의 경제난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이 지난 2003년부터 시작한 '신경제정책'의 지상 과제도 에너지원 확보이다.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에너지 수급 상황의 경우,

먼저 석탄생산량은 2002년에 2,190만 톤, 2003년에 2,230만 톤, 2004년에 2,280만 톤이었으며 이는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던 1990년대 중후반의 생산실적과 차이가 없다.

그리고 발전량의 경우, 2002년에 190.4억 kWh, 2003년에 196.0억 kWh, 2004년에 206억 kWh로서 1989년의 약 300억 kWh에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원유의 도입량은 2002년에 59.7만 톤, 2003년에 57.4만 톤, 2004년에 61.3만 톤, 2005년에 52.3만 톤으로 1989-90년도 수준의 1/5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산 시설의 가동을 커다란 타격을 주고 있다.

북한은 에너지 수요의 대부분을 '석탄'과 '수력발전'에 의존한다. 2001년에 1차 에너지 수요의 약 86%가 석탄이었으며, 발전 능력으로는 석탄 화력과 수력 발전이 거의 50%씩 차지하고 있지만, 발전량 실적에서는 2001년도에 수력이 약 6%, 화력이 약 31%이며, 화력 발전은 연료 부족으로 가동률이 매우 낮다(2001년의 전력 수요는 1999년 실적

- 
8. 『연합뉴스』 2006년 10월 15일. 중국의 한 공사 책임자는 "현재 남은 것이라고는 사후 처리밖에 없다. 이미 투자한 자금을 바로 빼낼 수도 없이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싶지만 인수하겠다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중국 관리자는 "우리는 현재 더 이상 북한 측과 함께 일할 용기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수출대금 100만 달러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 핵심협은 상황을 전보다 더 나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의 58%).

전력부족 때문에 정전이 빈발하고 있으며, 송전할 때 전력손실이 많고 일부의 수력발전은 1996년의 홍수 영향으로 아직 조업이 재개되지 않은 상황이며, 시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2005년 1월에는 평양에서 정전이 빈발하고 서민은 야간에 촛불을 켜고 신탄(나무)을 이용하여 난방을 하여, 1990년대의 최악의 경제난 시기를 상기시켰다. 전력 부족의 심화는 수력 발전도 석탄 부족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다가, 전력의 절반 이상이 국방이나 군수 공업에 충당되고 있어, 민간부문에서는 전력 부족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의 생산은 이전보다 약간 증가하였으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석탄은 식량과 교환되기 때문에 암거래로 부정 유출되기도 하며, 전력부족으로 석탄의 철도 수송도 침체되고, 1995년 이후 가정용의 석탄배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대거 산림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연료로 사용한 결과, 산림은 황폐하고 홍수의 유인이 되어 수력 발전의 가동률이 낮아졌다.

북한의 원유처리능력은 약 7만 b/d이다. 옹기에 7.1만 b/d (2.9만 b/d 1기, 4.2만 b/d 1기)정제시설이 있다. 선봉에 4만 b/d 규모의 승리화학연합기업과 용천군에 약 3만b/d의 봉화화학공장의 제2정유공장이 있으며, 가동률은 매우 낮다(Oil & Gas Journal誌). 현재 중국으로부터 1만 b/d의 따칭(大慶)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을 뿐이다. 중국의 대북한 부탄가스 수출은 2003년에 9만8천 달러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2004년 1~2월에는 9천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2% 감소하였다(중국의 통관통계).

석유수요는 대체 불가능한 자동차용 휘발유, 디젤유, 제트유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중유의 수입은 2002년 11월 이후 제로였다. 석유수

요는 1차 에너지수요의 약 6%이다. 중국의 대북한 따칭 원유 수출은 2004년 1~6월에 3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22만 톤 감소하였으며, 7~11월은 제로(0)였다. 12월에는 23만 톤으로 단속적이었다.

### 3. 공장·기업소의 가동 실태

북한에서 현재 공장 및 기업소들은 대부분 가동이 멈추어 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 20-30%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 원자재와 에너지의 부족은 공장 및 기업소의 가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위에서 살펴 본 석탄 생산량, 발전량, 원유 도입량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전반적인 가동의 중지 현상이 나타난 지 10여 년이 경과하고 있다.

철강, 시멘트, 비료 부문의 공장 가동률을 1992, 1998, 2000, 2003년의 추이를 보면, ▲1992년: 30.0%, 39.5%, 22.0% ▲1998년: 15.8%, 26.2%, 11.2% ▲2000년: 18.2%, 38.3%, 15.3% ▲2003년: 18.3%, 46.1%, 11.8%를 보여주고 있다(한국은행, [www.bok.co.kr](http://www.bok.co.kr)). 그런데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의 경우, 철강업은 0%, 의류부문은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다.<sup>9</sup>

중요한 군수 공장들은 가동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가동도 풀가동(만가동)이 아니며 특정 시간대에 전력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생산하도록 하고 있다. 가령, 군수장비를 생산하는 공장에 ○월 ○일-○일 까지 전력을 공급하니 그 시일을 맞추어서 생산을 감행하는 방식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생산 공장

---

9. 2006.10.30. 주간 이코노미스트, “북한에서 착실히 진행되고 있는 시장경제화를 보다”.

대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공장들의 가동률 상황은 2006년 현재 북한의 공장가동률은 지역에 따라, 군수 민수에 따라, 생산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20%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제2장

## 북한에서의 시장과 시장경제







제2장  
⋮  
북한에서의 시장과 시장경제

1. 시장과 시장경제의 등장 배경

북한은 현재 시장이 전국적으로 틀을 잡아가고 있다. 집권하고 있는 공산당이 위로부터 의식적으로 '시장경제'를 추진해 온 베트남과 중국과는 달리 북한에서 시장과 시장경제는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시장경제에 대해서 북한은 베트남과 중국과는 달리 이러한 시장경제적인 방향과 속도에 대해서 제동을 걸어 왔으며 제동을 걸 기회를 항상 엿보고 있다.

일반적인 정치 담론인 '사회주의 원칙'과 그것의 현실적 작동 근육인 '非사회주의 검열 그루뎀'의 맹렬한 활동을 통한 통제가 있으며, 다른 축에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으로 비춰지는 시장적 형상들을 통

제하기 위한 경제적 기제들을 구상함으로써 제동을 걸고자 했다(가령 도매반과 도매시장을 창출함으로써 시장적 불안정성과 자의적인 유통을 통제). 하지만 전자에 대해서 북한에서 ‘사회주의’라는 담론은 1990년대를 경과하면서 ‘비극’을 상징하는 담론이 되어 버렸으며, 후자에 대해서 생산과 공급의 능력이 부재한 국가는 그러한 것들을 현실화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시장 경제는 시장(market 혹은 marketplace)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특정한 공간이자 조직이며 제도이다. 적어도 시장이 포괄하는 사회구성원의 범위가 확장되고 경제가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작동하여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시장경제가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시장과 시장경제는 국가의 억압 권력을 우회해서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형성과는 경로가 대단히 대조적이다.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적 현상은 자본주의적 현상 까지도 내비치고 있다.

북한의 시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상업은 “손에서 손으로, 눈에서 눈으로 하는 상업”을 이미 능가했다. 북한에서 시장 경제는 이제 시장만이 통제하고 조정하며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는 이 자기 조정 메커니즘의 손에 맡겨져 있다.

시장경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는 바로 ‘전국 시장’과 ‘전국적인 가격 동향’이다. ‘전국 시장’의 형성은 북한 시공간을 외부에서 지배하는 힘들과 단일한 전국시장을 만들어 내려는 북한 내부의 힘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과 갈등을 수반한다. 그것은 제도와 非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어코 형성되었다(〈그림 1〉을 참조).

또한 가격 동향에서도 전국적인 시장화 경향이 포착된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 상품의 가격은 대단히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하다. 1990년대 이전까지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한 국정가격과 배급제로 유지되던 북한 경제의 성격과는 대단히 판이한 동향을 갖추고 있다.

국가가 고정하는 지도가격이나 한도가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장가격의 등락은 유사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요 도시에서의 환율 또한 등락이 유사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현재 전국시장이 작동함으로써 시장경제가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 시장과 시장경제

우선 북한에서 대두해 온 ‘시장’(market일 뿐 아니라 marketplace)과 이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시장경제’ 개념을 일반적인 차원에서 논의한다. 무엇보다도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라도 ‘시장’을 개념 정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고전파나 신고전파에서 주장하는 ‘시장’은 인류 사회의 어디든지 존재하며, 따라서 시장은 교환이 존재하는 바로 그 지점에 항상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시장은 그러한 식으로 규정하기에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한편 제도주의 학파에서는 제도로서의 시장을 강조한다. 시장은 재화의 교환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며 교환을 촉진하고 구조지우는 사회적 제도의 집합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제도주의적 발상대로 시장을 하나의 제도로서 보게 된다면 북한에서 시장은 지역적으로만 제도화되어 있다.

매우 상식적이면서도 논쟁적인 문장이지만 ‘시장은 고래로부터 존재해 왔다’. 북한에서의 시장을 포함해서 원형적(原型的)인 시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로부터 일탈했다고 판단해야 하는 시장의 형태나 종류도 존재하지 않는다. 시장은 모든 종류의 사회에서 생겨나며, 일반화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유형과 패턴을 보여준다. 브로델(F. Braudel)의 말을 빌면, 인류가 살아온 공동체에서 시장의 발전에 관한 단순하고 단선적인 역사와 같은 것은 없다. 시장에는 전통적인 것, 고졸한 것, 근대적인 것, 대단히 근대적인 것 등이 뒤섞여서 존재하기 마련이다.<sup>10</sup> 하지만 고대의 유럽과 동아시아의 시장이나, 마르셀 모스와 레비-스트로스가 사례로 들었던 쿨라(kula)와 포틀래치(potlatch)와 같은 교환체계, 유럽의 중세와 前근대의 시장, 20세기와 21세기의 시장 등을 일괄적으로 하나의 성격으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어쩌면 시장이라는 것이 광범위한 시공간 속에서 계속 설명되어야 하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추상화된 어떤 것으로 수렴시키기가 힘들 것 같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시장은 ‘북한적 현상’ 속에서 그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다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기능해 왔던 시장이 북한 사회주의 역사에서 초기 형태의 것이기는 하지만, 그 시장이 매우 조악하다는 이유로 혹은 여전히 북한의 국가가 ‘사회주의적 원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의 시장을 시장 일반의 형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非역사적인 견해이다. 북한에서의 시장, 그곳에서는 일반적인 교환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환가치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그리고 적어도 2002-2003년 이후에는 국가가 승인한

---

10. 페르낭 브로델, 주경철 옮김,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을 참조.

장소가 되었다.

이제 시장을 기반으로 한 시장경제에 대한 정리를 해야 한다. 특히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정의되어야 한다. 확실히 시장 경제는 시장(market 혹은 marketplace)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다.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시켜주는 특정한 공간이자 조직이며 제도이다. 적어도 시장이 포괄하는 사회구성원의 범위가 확장되고 경제가 근본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작동하여 전국적인 시장이 형성되었을 때 시장경제가 성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경제학적 의미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제인류학적’인 의미에서 그러하다.

칼 폴라니(K.Polanyi)는 시장사회 혹은 시장경제가 국가에 의해 위로부터 외재적으로 창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시장의 창출은 국가의 억압 권력의 심대한 증대를 요구했다는 것이다.<sup>11</sup> 하지만 북한에서 시장과 시장경제는 국가의 억압 권력을 우회해서 아래로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전개되었다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시장경제의 형성과는 경로가 대단히 대조적이다.

현재 북한의 시장경제적 현상은 자본주의적 현상까지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즉 농업 부문에서 소작농이라든가 상업 부문에서의 비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진척되고 있는 고용-피고용 관계 등은 ‘자본주의적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징후들이지만 자본주의는 아니다. 그것은 非제도적, 불법적 현상으로 국가에 의해 금지된다. 브로델의 논점을 빌리자면 자본주의는 ‘독점’의 형성과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자본주의란 자연스러운 시장경제의 질서를

---

11. 칼 폴라니, 『거대한 변환』, 177쪽

왜곡하고 교란시킴으로써 자기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경제영역을 지칭한다.<sup>12</sup>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북한에서의 이러한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현상들은 시장경제체제의 징후들에 포함되는 현상으로 독해하는 것이 정당하며, 오히려 시장경제가 거침없이 확산되어 전일화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 순수한 시장경제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과잉 추상의 결과일 것이다.

한편, 시장 혹은 시장경제의 최상층부가 자본주의인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구가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경우도 있음을 역사적으로 알 수 있다. 바로 중국이 그러한 경우였다.<sup>13</sup> 북한의 시장에서 실천되고 있는 상업은 “손에서 손으로, 눈에서 눈으로 하는 상업”을 이미 능가했다. 북한에서 시장 경제는 이제 시장만이 통제하고 조정하며 방향을 결정하는 경제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재화의 생산과 분배의 질서는 이 자기 조정 메커니즘의 손에 맡겨져 있다.

게다가 북한의 시장경제를 이끌고 있는 ‘상업’이 자본주의의 기반이기는 하지만 상업이 곧 자본주의는 아니다. 북한에서 시장의 법칙에 순응하는 상인들과 장사꾼들은 브로델이 구분한 시장경제에 터를 잡은 사람들이지만 자본가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

12. 이는 브로델의 성찰이다. 브로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시장경제에서 나왔지만 시장경제와 대립한다. 브로델, 앞의 책.

13. 중국의 하층(시장 혹은 경제)에서는 시장들, 수공업 장인들, 행상들, 상점들이 발달해 있어서 대단히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 위로는 국가 기구가 모든 것을 장악해 버렸다. 국가는 관료제적 방식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부유해진 상인을 감시하고 심지어 원하면 언제든지 이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 코홍(公行)처럼 국가의 보장을 받는 집단들이거나 중앙 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말레이 군도 등 해외로 발전해 나간 화교들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와 국가기구에겐 자본축적이 가능한 것이다. 이 경우 국가기구가 자본주의를 대체했다는 것이 된다. 즉 억압적인 국가기구가 자유로운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시장경제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는 바로 ‘전국 시장’이다. 따라서 현재 ‘시장경제의 북한’을 주장할 때 그 근거로서 당연히 ‘전국 시장’의 등장을 설명해야 한다. 북한에서 ‘전국 시장’의 형성은 북한 시공간을 외부에서 지배하는 힘들과 단일한 전국시장을 만들어 내려는 북한 내부의 힘 사이에 형성되는 긴장과 갈등을 수반한다. 그것은 제도와 비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어코 형성되었다(〈그림 1〉을 참조).<sup>14</sup>

한편, 전국시장의 형성은 또한 가격 동향에서도 전국적인 경향이 포착되어야 한다. 현재 북한 전역에서 상품의 가격은 대단히 유동적이며 변화무쌍하다. 1990년대 이전까지 국가계획위원회를 통한 국정가격과 배급제로 유지되던 북한 경제의 성격과는 대단히 판이한 동향을 갖추고 있다. 국가가 고정하는 지도가격이나 한도가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시장의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장가격의 등락은 유사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요 도시에서의 환율 또한 등락이 유사한 동향을 보여주고 있다.<sup>15</sup> 이를 통해서 북한에서는 현재 전국시장이 작동함으로써 시장경제가 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국가와 시장경제

북한에서 시장경제는 밑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확대 중에 있다. 북한

---

14. 이영훈, “북중무역의 현황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2006.2의 그림을 참조할 것.

15. 북한의 지역에 따른 시장가격에 대해서는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41호 (2006.10.11);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등을 참조할 것.

의 경우 그러한 시장경제는 원래 역사적으로 이미 형성되었었다. 북한 지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북한은 시장경제였으나 그 이후 관료정과 계획기구가 이 사회를 장악하면서 계획경제의 형식을 갖추었다. 이른바 시장경제의 ‘단절’이었던 것이다. 좀 더 완곡하게 표현하자면 이러한 관료정의 증여적 국가-사회 관계는 속성상 봉건적이었으며, 오히려 ‘前자본주의’(pre-capitalism)의 성격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단절은 역사적 경험상으로는 후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오히려 1990년대의 시장경제의 재등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장경제의 부활이다. 1990년대를 거치면서 기존의 공식적인 권위를 부여 받아 작동해 왔던 계획경제가 그 기능과 역할을 소진하자 다시 시장경제가 들어 찬 것이다.

이러한 재등장은 어떤 의미에서는 ‘퇴행적’인 것이었다. 즉 경제의 혹독한 위기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것은 과거의 경제생활을 되풀이 왔다는 의미와 그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시장들이 매우 초보적이고 일천하다는 의미(초보적인 물물교환이 혼잡되어 있다)이다. 하지만 아무리 초보적인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장소임에는 틀림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시장경제인 것은 이 경제가 교환가치의 영역에 확실히 진입했기 때문이다.

현 시기 북한에서의 시장경제는 도덕경제의 기능이 정지한 곳에서 등장했다. 따라서 북한의 현 시장과 시장경제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단절’의, ‘붕괴’의 산물이다. 계획경제의 빈터에서 버섯처럼 솟아나온 것이다. 그것은 소나무가 죽은 자리에 버섯이 생겨나듯이 버섯은 소나무와 연속성을 결코 갖지 않는다.

1990년대의 극심한 경제난, 에너지난, 식량난으로 표상되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시기뿐 아니라, 2004-2006년 현재에도 북한에서 ‘시



장'이 작동해야만 현실은 존재하고 있다. '지주 마누라가 산에 가는 해'(2004년)라든가 '백만 장사 행방 다니는 해'(2005년)라는 북한 주민들의 표현은 북한에서 자구적(自求的)인 장사와 시장 행위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은유하고 있다.<sup>16</sup> 모든 것이 부족한 북한 시장은 현재 오로지 중국에만 전면적으로 개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 상품의 점유율이 적어도 70% 이상으로서 극도로 높은 상황이다.<sup>17</sup>

한편, 전국적 시장의 창출은 국가의 역할, 혹은 국가와 사회 간의 역관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다. 위에서 언급했던 북한 사회의 제반 상황들(만인이 상인이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래로부터의 시장경제를 창출하도록 했다. 그것은 인민에게 광폭정치를 실천할 수 없었던 국가의 무능력의 대가였으며, 그로 인해 전국에서 시장이 폭풍처럼 등장하였다. 시장 메커니즘이 도입되고 확산되었으며 상품화와 화폐화, 그리고 가내수공업자와 상인들이 합법과 불법을 횡단하여 분업질서를 창출하면서 사회를 가득 메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시장질서에 대한 일종의 사후적 정당화를 실천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2002년 12월 장마당을 개방하면서 장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2002년 7·1조치 이후 현실화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는 방침을 내렸다. 그러다가 2003년 3월에 농민시장의 명칭을 '시장'으로 바꾸고 그동안 금지 품목이었던 공업 제품의 유통을 공식 인정하게 되었다.<sup>18</sup> 각 지역의 '농민시장' 간판을 떼 내라는 지시

---

16.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서울: 정토출판, 2006), 15쪽.

17. 2006년 8월 현재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품 중에서 중국산이 70%, 북한산이 20%, 러시아 및 일본산이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인민일보 인터넷판 (2006.8.11); 새터민과의 인터뷰.

가 있었다.<sup>19</sup> 무엇보다도 2003년 3월에 북한이 취한 종합시장 조치는 제도적 차원에서 시장경제를 촉진시킨 시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내각지시 제24호와 내각결정 제27호 문건에 따르면 김정일 위원장은 2003년 3월9일과 16일, 4월 3일과 13일, 30일 등 수차례에 걸쳐 시장의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농민시장을 소비품 종합시장으로 확대한다는 조치였다.
- 시장에서는 국가통제품을 제외한 농토산물, 식료품,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국내생산품과 수입상품, 개인이 만들었거나 여유로 가지고 있던 물건을 팔 수 있도록 규정했다
- 가격 조절의 기초가 되는 쌀과 먹는 기름(식용유), 사탕가루, 맛내기(조미료) 등에 대해 시·군 인민위원회가 자체 실정에 맞게 수시로 '한도가격'을 정하도록 조치했다.
- 시장 상인들은 매대 면적과 위치에 따라 매일 시장사용료를 시장관리소에, 소득 규모에 따라 국가납부금을 매월 재정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국영기업소와 협동단체, 개인들은 매월 소득액을 신고해야 한다. 또 암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물건을 회수하거나 시장 밖으로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인들은 납부금을 내도록 하였다. 매대 면적과 위치에 따라 매일 사용료를 시장관리소에 납부하며, 소득규모에 따라 '국가납부금을 매월 재정기관에 납부한다. 10일에 한 번씩 중요 상품의 최고한도 가격을 설정하여 시장입구의 게시판에 고시한다.

---

18. 『조선신보』 2003년 4월 1일과 6월 16일에는 시장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상품유통의 한 형태'로 보았으며, "사회주의라 하더라도 시장의 기능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하여 시장 기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보여주었다.

19. 이러한 사실은 2003년 6월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국가의 시장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는다. 국가는 이미 발전한 시장경제에서의 교환과 가격이 시장적으로 유동하지 않도록 개입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시도가 2004년 4월부터 가동되도록 한 도매반의 시도이며, 장기적으로는 유통과 판매를 일체화하기 위한 도매시장의 구상이다.<sup>20</sup> 이것은 사적 전문 상인계층을 행정적 통제 방식이 아니라 경쟁적 방식으로 도태시키려는 구상 속에서 나온 것이다.<sup>21</sup> 결과적으로 시장경제의 전개양상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이며 ‘시장관리’가 아닌 ‘국가관리’로의 복귀를 지향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 2. 북한 시장경제의 동학

현 시기 북한 시장경제의 동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전역에서 존재하여 작동하는 시장들의 편재를 살펴보아야 하며, 그러한 지역 시장들이 전국적으로 어떤 네트워크 상황 속에서 가동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시장이 지역적으로 관리되는 메커니즘과 그 속에서 행위하는 시장 주체들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 1) 시장의 편재들

현재 북한에서는 2003년 3월의 종합시장 조치이후 전국적으로 약

---

20. 『조선신보』 2004년 9월 7일.

21. 홍익표 외, 『최근 북한의 가격 유통 체제 변화 및 향후 개혁과제: 중국과의 비교연구』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 138쪽.

300-350여개의 종합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원래는 큰 도시 같은 경우는 구역마다 시장을 하나씩만 세우라고 했고, 전국적으로는 군 단위에서는 1-2개씩, 시 단위에서는 3-5개를 세우라는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2005년 현재 평양에만 약 40여 곳의 이상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2</sup> 이들 시장에서는 ‘합의 가격제’(판매자와 구매자간의 흥정에 의해 가격이 결정)로 판매한다.

현재 북한에서 도매 시장(물건이 여러 지역으로부터 많이 집적되어 다른 지역들보다 가격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들)의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장이 있다. 평양의 ‘통일거리 시장’,<sup>23</sup> 함경북도 청진의 ‘수남 시장’, 함경북도 나진선봉의 ‘나진선봉(나선) 시장’, 평안북도 신의주의 ‘신의주 시장’, 평안남도의 평성의 ‘평성 시장’, 함경남도 함흥의 ‘사포 시장’ 등이 그것이다. 신의주 시장은 중국의 화교들이 단둥(丹東)에서 물건을 들여온다. 특히 신의주에서 생산되는 신발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발보다 질이 좋아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sup>24</sup>

‘평성 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다.<sup>25</sup> 평성시장은 평양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기본적으로 평양으로의 접근이 제한

22. 좋은벗들, 앞의 책, 45쪽.

23. 『조선선보』 2004년 10월 19일; 『월간조국』 2004년 11월호. 주지하듯이 평양의 대표적인 시장은 락랑구역 통일거리에 위치한 ‘통일거리 시장’이며 2003년 8월에 문을 열었다. 2004년 현재 매대 수는 약 1,500개에 이르며 공장, 기업소의 직판 매대는 약 80개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자재 혹은 장비를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24. ‘까치라는 상표의 신의주산 신발은 최고가 2,700원선에 거래되고 있다. 중국산 신발이 2,700~2,900원선, 타지역 신발이 1,400~1,700원선에 거래되는 것과 비교해볼 수 있다.

25. 평성 주민이 약 15만 가량 되는데 약 80% 이상이 세끼 쌀밥을 먹을 정도로 생활수준이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다. 물류 중심지역이라 장사가 활발하고 물가가 싸기 때문이다.

(평양 여행 허가증이 필요)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의 길목인 평성에서 물건이 쌓이게 된다. 이로 인해 평양 상인들은 평성 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한다. 따라서 평성 시장의 물가는 평양 시장의 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평성 시장은 도매시장의 역할을, 평양 시장은 소매시장의 기능으로 분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의 <그림 1>과 같다.<sup>26</sup> 단 전국시장의 형성을 보여주기 위해 간략하게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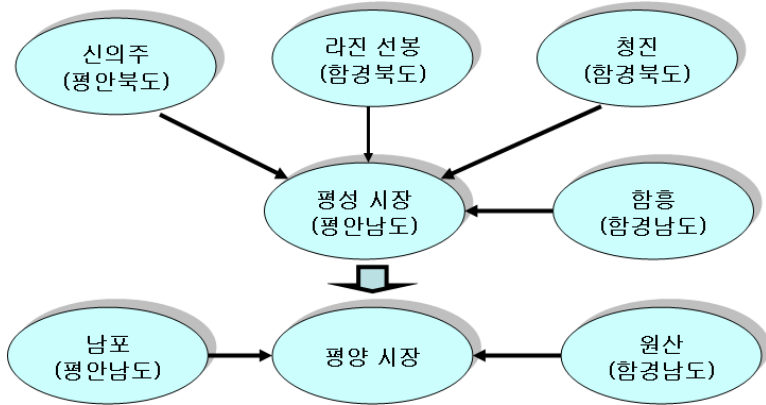
함경남도의 함흥의 경우, 성천 시장(함흥시 성천강 변)이 제일 번성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 외에도 사포시장, 회상 시장, 동흥산 시장 등이 있는데, 그 중 도매 역할을 하는 것은 사포시장이다.<sup>27</sup>

함경북도의 경우, 온성에 ‘중성 시장’, ‘삼봉 시장’, ‘온성 시장’이 있는데 이 중 온성 시장이 가장 규모가 크다. 그리고 회령시 남문동에 위치한 “남문 시장”에서는 주로 식량과 생필품을 거래하고 있다. 회령에서 시장은 원래 ‘망향동’에 위치하였으나 현재의 ‘남문시장’으로 옮겼다가, 새로 신축한 회령시장(폐교가 된 舊회령남중학교 운동을 개조하여 만들었음)으로 통폐합한다는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함경북도 회령에는 ‘국경 시장’을 설치했다. 주로 중국 상인들에게 매대를 분양하는데, 북한 국내에서 도매시장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장관리소가 설치되며, 300개 이상의 매대가 구비된다고 한다.

26. <그림 1>은 중요한 지역 시장들 간의 네트워크를 간략하게 그린 것이다. 실제 시장들간의 네트워크는 이보다 더 복잡하며 범위가 넓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27. 성천시장은 2004년에 공터 옆 건물을 허물어 시장터를 확대했다고 한다. 해산물은 금야군 원평리에서 들어온다. 성천시장은 사포지구 시장으로부터 물품이 들어온다고 함. 사포지구 시장은 각 기간기업소별로 행방 다니는 도매상인들로부터 물건을 후결제로 넘겨받아 성천시장으로 넘긴다고 한다.

〈그림 1-1〉 북한 내부 유통 경로의 사례: 전국 시장의 형성 사례



황해북도의 대표적인 시장으로는 사리원시의 ‘상매동 시장’(오전 9시 개장-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약 26개의 매대, 상인 약 150명)과 ‘정방 시장’, 평산군의 ‘평산 시장’이 있으며,<sup>28</sup> 개성시의 ‘보선 시장’에서는 곡물유통이 주로 이루어지며, 황해북도의 연안, 배천, 재령에서 주로 들어온다. 황해남도에는 해주시의 ‘양사 시장’이 있다. 그 밖에 평안남도 안주시의 ‘남흥시장’, 평안북도 룡천의 ‘룡천시장’(상인 300명 규모, 구매자를 합하면 700-800명 규모, 중국산이 80%가량 점유), 양강도 혜산의 ‘혜산 시장’, 강원도 원산시의 ‘동명시장’ 등이 있다. 이 밖에도 지역마다 가동되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들이 전국적 유통에 참가하여 전국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8. 평산 시장에는 신의주 장사꾼들이 많다. 그들은 주로, 중국 담배, 라이타, 원주필, 신발, 내의류, 단복, 카스테라빵, 껌배기들을 가지고와서 평산에서 판다. 대신 평안북도 장사꾼들이 쌀과 강냉이를 닦치는대로 사들인다.

## 2) 시장관리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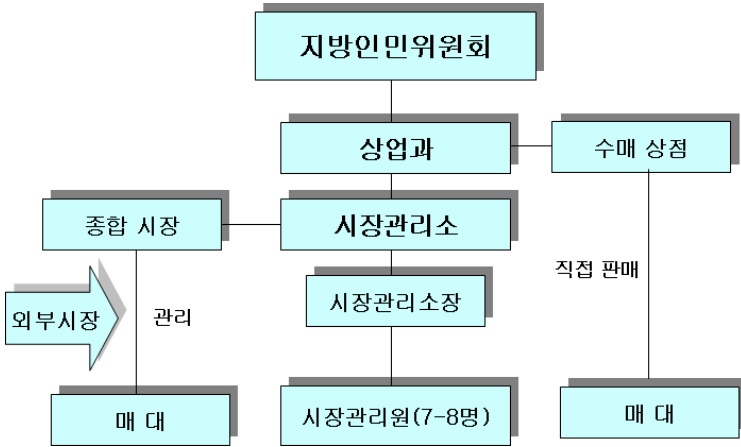
### (1) 시장 관리와 시장관리소

북한에서 현 시기 시장은 이미 국가가 일정한 화폐(세금 형식)를 수취하는 대가로 허용하는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어떤 의미에서 북한의 '시장 관리'라는 것은 '시장경제적 관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정부가 세금의 형식을 통해 관리하는 시장에서는 가격이 국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법칙을 기본으로 구매자와 판매자, 즉 참가자들의 흥정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성격은 지극히 시장경제적이다.

한편, 종합시장을 관리하는 '시장관리소'는 시장관리소장이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일반 상인들은 시장(市長), 시장장(市場長), 마당장, 혹은 관리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시장관리소는 지방인민위원회 내의 행정경제위원회 상업과(상업관리소는 국영상점을 관리한다)에 소속되어 있다. 원래는 '수매 상점'을 관리하였는데, 수매 상점을 통해 상품유통 과정에 개입하여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sup>29</sup> 현재 수매 상점은 국정가격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가격이 쌀 때도 있으나 대체로 흥정이 안 되기 때문에 비싼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30</sup>

- 
29. 수매상점의 설립 목적은 유통되는 화폐들이 국가로 귀속되지 않자 이를 국가로 귀속시키기 위해서 장사꾼들로부터 실제 가격보다 싼값으로 물건을 수매한 뒤 시장관리원이 직접 시장 매대에 나가서 일반 주민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익을 챙긴다.
30. 이 시장관리소에서 상인들로부터 받는 각종 세금과 장세 및 관리비는 지역행정경제위원회로 납부되며, 새터민들에 따르면 도나 상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 소비한다고 한다. 아마도 이는 '지방예산제'를 지칭하는 것 같다.

〈그림 1-2〉 시장관리소의 구조



시장관리소 산하에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시장관리원이다. 지역적으로 시장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주로 퇴역군인, 사회안전부 요원, 퇴직한 당 간부, 사회복지대상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치 강연회나 정책 강연회 등이 개최될 때에는 인민들을 동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특이한 증언도 있다. 상인들이 시장관리소에서 제공하는 유니폼이 있다는 것이다. 자리에 따라서 세금을 바치면 유니폼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시장 관리하는 시장관리소 자체가 옷을 그렇게 통일을 시켰다는 것이다.<sup>31</sup>

종합시장의 운영시간은 지역마다 실제로 운용되는 시간이 다르다.

31. 새터민과의 인터뷰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2006년 7월 1일부터 당국의 지시에 의해 전국적으로 변경했다. 계절에 따라 시장의 운영 시간이 달라지는데, 해가 짧은 겨울(11월-3월)에는 오후 1시에 시장을 열어 6시경에 끝나지만 여름철(4월-10월)에는 2시간 더 연장된 저녁 8시까지 운영된다. 단 매주 일요일과 명절 대목, 매월 1일, 11일, 21일, 그리고 농장원 휴식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종일 열린다. 그러나 농촌 총동원 기간처럼 농촌 전투로 총비상이 걸리는 시기에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제한 운영된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이다. 시장 금지 품목은 껍담배, 수입완구, 가구류 합판, 국내산 유리제품 등이며, 돼지고기와 같은 식품류는 식품 안전을 고려해 수매상점에서만 취급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상인들이 납부해야 하는 매대와 장세의 수준은 지역별로, 상품별로, 상품 수량별로 차등적이다. 변방 지역보다 중앙 지역이, 소도시보다는 대도시가, 소규모 시장보다는 대규모시장이, 농산품시장보다는 공산품시장이 장세가 대부분 높다. 이는 세금의 형식을 차용하여 사적 자본의 공적 자본화의 기능을 한다.

2004년 경 종합시장의 관리에 있어서 국영기업소 개념이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즉 종합시장도 국영기업소 지배인이 운영하여 소득에 따라 국가납부금을 내는 독특한 국영기업소가 되었다는 것이다.<sup>32</sup>

## (2) 시장의 행위 주체들

현재의 북한 사회를 유지시켜 주는 힘은 국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동자나 농민도 아니다. 바로 '상인'(돈주에서 매대 상인에 이르는)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들은 공식적인 시장(이른바 종합

---

32. 『조선신보』 2004년 9월 7일.

시장인 ‘시장’)을 포함해서 북한 시장경제의 모든 메커니즘을 지휘하는 보이지 않는 지휘자이자 통제자이다.

어찌 보면 수많은 문명에서 상인들은 친숙한 존재이며, 이들 상인들에게 이익이라는 동기는 고유한 것이다. 북한에서도 이것은 진실이다. 공급 부족과 이로 인한 화폐량의 상대적 과잉으로 물가상승북한에서 물가상승은 항상 초인플레이(hyper-inflation)적 현상을 띠었대이 항상적이었으며 따라서 일종의 ‘장기적 구조’로서 작용했다. 이것이 북한 상인들의 이윤을 높여주어 북한 시장경제의 전개와 발전에 자극과 동력을 제공해 왔다.

북한에서 상인들은 국가의 말단 권력인 지방인민위원회의 시장관리소가 운영하는 시장의 매대를 훨씬 벗어나서 자신의 이익 추구 공간을 끊임없이 상상하고 실천한다. 바로 이 지점이 북한의 권력과 상인이 불일치를 생산하는 지점이며, 북한 시장경제의 전국적인 확산을 유발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현재 북한에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거나 참여하고 있는 시장 행위 주체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물론, 국영기업소, 국영농장, 외화벌이, 자재인수원, 전문 장사꾼, 일반 주민들이 모두 시장에 참가한다. 무엇보다도 유통 경로를 중심으로 중요한 시장 행위 주체들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상품 유통을 촉발시켜 개시하는 주체들이 바로 ‘돈주[혹은 전주(錢主)]이다. 돈주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약 5천-1만 달러 이상을 소유한 돈이 많은 사람들이다.<sup>33</sup> 이들은 상품의 유통을 자극하여

---

33. 가령, 평안남도 평성시는 전국적으로 돈주들이 제일 많은 곳이라고 한다. 평균 10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돈주가 약 20-30명이나 된다고 한다.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막대

전국적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돈주는 절대로 막기 어렵다’고 한다. 이들 때문에 경제가 작동하고 국가가 보장할 수 없는 상품의 유통을 보장하니까 그러하다. 만약 황해남도의 해주에 물건이 들어오려면 돈주가 있어야 한다. 돈주가 있어야 함경북도의 청진과 라진, 평안북도의 신의주에 가서 상품을 대량으로 사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돈주는 전국적인 유통을 자극하여 전국적으로 상품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이 ‘중간 상인(도매 상인에 속한다)으로 총칭된다. 중간 상인들은 돈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 구입하여 시장의 매대 상인들에게 판매하며, 그 판매를 통해 회수한 수익으로 돈주에게 원금을 갚는다. 이리하여 다시 돈주로부터 외상으로 물건 구입하는 것을 되풀이하여 이익을 남기게 된다. 이들은 돈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셈이며, 전국적인 시장에서의 가격 시세를 파악하고 물가동향을 파악하여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전국적 물가동향의 균질성을 보장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5-10명의 소매상인과 연결되어 있어 물건을 소매상인들에게 넘겨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중간 상인들은 무리지어 서비차 [서비스(봉사)차의 약어로 사웁를 빌려 평양, 평성, 원산, 남포, 청진, 나진선봉, 신의주 등 물류 지역을 왕래한다. 인상된 가격으로 시장의 매대(소매 상인들)에 판매한다.

한편, 이들은 화교나 전문 장사꾼으로부터 상품을 도매가로 구입하여 소매가로 팔아서 차익으로 살아가기도 한다. 혹은 산지에서 싼값으로 사서 다른 지역에 비싼 값으로 팔기도 한다. 가령, 돈주로부터 돈을

---

한 양의 국가공채를 사거나 현금을 하기도 하여 감사장이나 표창을 받으면 안전하다. 좋은벗들, 앞의 책.

꾸어 해안 지역에 가 해삼이나 명태 등의 해산물을 구입하여 국경지역이나 산간지역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것이다.

시장 유통망 속에서 도매 상인들 간의 경쟁도 치열한데 이들 간의 판매 가격 경쟁은 그 자체로 치열한 삶의 경쟁이다. 먼저 ‘달리기 선수들’(일종의 현지 구매 상인을 묘사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달리기’란 상인이 현지에서 물품을 구입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판매하는 것을 총칭한다. 가령, ‘달리기’를 통해 직접 구입하는 상인들은 중간 상인에게서 물건을 넘겨받은 소매 상인들보다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게 된다. 따라서 70%를 판매한 뒤 30% 정도 남았을 때 다시 ‘달리기’를 하는데, 이때 남은 30%를 재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과감히 가격을 내리게 된다.<sup>34</sup> 경로를 요약하면, ‘달리기 상인’→ 중간상인→ 매대 상인(좌판장사, 소매상인) 순으로 이루어진다.

가령 함경북도 새별군의 사례를 보자. ‘탄 달리기’, ‘새별-청진 달리기’<sup>35</sup>, ‘새별-라진 달리기’(달걀 달리기), ‘새별-남포 달리기’(쌀 달리기), 그리고 ‘새별-평성 달리기’<sup>36</sup> 등이 그것이다. 돈이 많은 달리기 선수들(돈주들도 포함해서)은 멀리까지(심지어 외국까지) 달리기를 하고, 자본금이 적은 사람들은 가까운 곳으로 달리기를 한다. 이들의 ‘달리기’ 또한 북한 시장경제의 ‘전국적 네트워크’에 지대하게 공헌하고 있다.

한편 북한 시장경제에서 달리기 선수들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 ‘되거리 상인’이다. 이들은 물건을 싸게 구입하여 소매 상인에게 넘

---

34. 좋은 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정토출판, 2006), 53쪽.

35. 새별에서 쌀, 옥수수, 콩 등을 사서 청진에 팔고, 청진에서 맛내기(조미료), 옷, 공업품 종류를 사와 새별에 판다.

36. 청진 등의 화교들 집에서 중국 화장품을 싸게 사서 평성에 팔고 평성에서는 공업품을 사 와서 판다.

겨서 차익을 얻는다. 이들의 역할은 '달리기 상인'과 유사하지만 달리기 상인 70%를 달리기를 하고 30%를 고정해서 장사한다면, 되거리 상인들은 70%를 고정해서 장사하고 나머지 30%를 달린다는 것이다. 이들 달리기 상인과 되거리 상인들을 일컬을 때 '차판드리'라는 용어로 총칭해서 부른다.

북한 시장경제의 '상인 피라미드'에서 최하위에 위치한 상인은 매대 상인과 메뚜기 상인이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소매상인들이다. 매대 상인들은 일정한 세금을 관리소에 지불하고 매대를 전세내어 장사를 한다면, 메뚜기 장사꾼들은 매대 없이 떠도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북한 시장경제를 최하위에서 떠받치며 지역 시장에서 상품을 유통시킨다.

### 3. 시장의 교환과 유통 구조

여기서는 북한 시장경제에서의 교환과 유통 구조를 살펴본다. 크게는 거시적 유통경로(국외 유통 경로와 국내 유통 경로)와 미시적 유통 경로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유통 경로 중 국외 유통 경로는 중국 등의 국외로부터 들어오는 경로를 말하며, 국내 유통 경로는 이미 전국 시장으로 형성된 국내 시장 간의 유통 경로를 말한다. 미시적 유통 경로는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소규모, 생산, 유통,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로를 추적해 본다.

## 1) 거시적 시장 유통

현재 북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대다수가 중국산이다. 지역에 따라 그 비율은 다른데 최소 70%에서 심지어 90% 이상이 중국산인 경우가 많다고 한다.<sup>37</sup>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은 북·중 국경에 현재 교량이나 철도가 연결돼 있는 랴오닝성 단둥(丹東), 지린성 지안(集安), 린장(臨江), 창바이(長白), 충산(崇善), 난핑(南坪), 썬허(三合), 투먼(圖們), 취안허(圈河), 훈춘(渾春) 등지가 중국산 상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통로가 되고 있다. 중국 측에서는 해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지만 그 간격이 넓어 해관을 경유하지 않는 밀무역이 성행할 수 있는 소지를 늘 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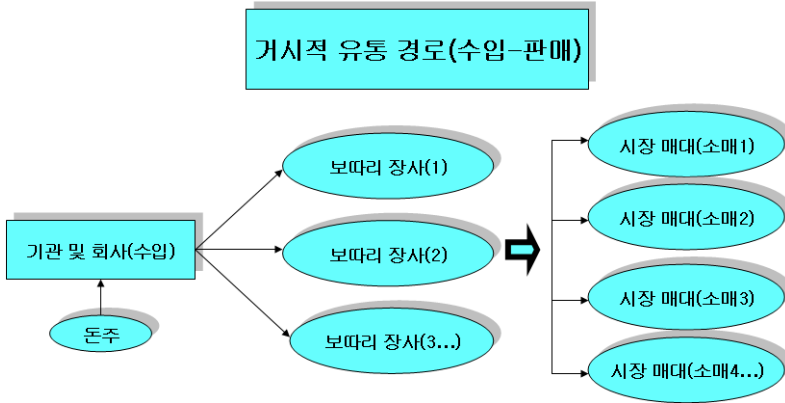
신의주(평북), 혜산(양강도), 무산(함북), 회령(함북), 남양(함북), 나진(함북) 등으로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은 북한 지역의 모든 곳에 다 들어간다. 이 중에서 공업품의 경우, 회령, 나진, 혜산으로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은 중국의 연결에서 주로 들어오며, 신의주로 들어오는 중국 상품들은 주로 단둥에서 들어온다. 단둥의 경우, 연변이나 투먼보다는 평양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수출상품의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우세하고 단둥과 마주하는 신의주에 1,000여명의 화교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조 변경무역에서 단둥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대북한 무역의 60%, 변경무역의 약 60%도 단둥 해관을 경유하고 있다.<sup>38</sup> 거시적으로 중국산이 유통되는 경로는 다음과 같다.

---

37. 새터민과의 인터뷰

38. 림금숙, “연변과 조선변경지역간의 경제무역교류 현황과 전망”, 김강일 편, 396쪽.

〈그림 1-3〉 거시적 유통 경로



중국 제품은 국경 지대로는 다 들어오는데, 정상적인 무역을 통해 들어오는 범위는 신의주와 원정이 제일 많고, 나머지는 그냥 개인들이 여행을 빙자하여 들어오는 것이다. 그런데 개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무역을 통하는 비율은 신의주하고 원정 수입량의 90%는 차지한다고 한다.<sup>39</sup> 이른바 ‘보따리장사’라는 것은 기관이나 회사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간 사람들을 말한다. 회사 및 기관이 중국으로부터 대량으로 물품을 수입하여 보따리 장사꾼에게 넘기면, 이들은 다시 시장의 매대에 넘기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보따리 장사들은 회사마다 정해져 있다고 한다. “누구누구는 우리 회사에 고정적으로 넘기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이다. 이 회사에서 보따리 장사에게 얼마의 가격에 넘겼는지는 비밀이다. 그리고 이 회사도 말고는

39. 새터민과의 인터뷰

그 누구에게도 그 물건을 주지 않는다.<sup>40</sup>

한편, 곡물과 채소 등에만 의존하였던 가계는 동네 시장 혹은 근거리 시장에만 의존하지만, 현금 동원 능력을 가진 사람과 숙련기술을 갖고 있어 노동력을 상품화하는 것이 가능한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보다 많은 현금수입을 얻으려 했다. 사실상 이것은 일상적인 공간을 넘어 광역 시장을 전제로 해야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이 시장의 지역적 유동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게다가 사실상 북한에서는 사업자 등록 제도가 없기 때문에 업종 규제도 없다. 국가가 업종을 규제하는 것도 아니고, 동업조직들이 있어서 이를 강압적으로 제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시장관리를 통해서 통제를 하지만 유통 범위는 대단히 전국적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권력에 의한 것으로도 폐쇄적인 단체에 의한 것도 아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생산자들과 상인들이 지역적 공간을 확실히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은행거래가 아니라 신용거래(외상)나 상품 화폐에 의한 것이 많기 때문에 북한 시장경제에서의 지역적 유동성에는 많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결국, 권력이 지역 시장으로 그 폐쇄성을 강제했지만, 사실상 북한의 시장은 전국시장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북한의 시장경제는 '시장경제에 반하는 상부구조 하에서 전국적 시장으로 통합되는 상황'에 있다고 결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북한 전역이 전국적 시장으로 통합되는 에너지는 바로 '상대 가격'의 차이에서 나온다. 상대 가격의 차이는 마치 압력의 차이와 같아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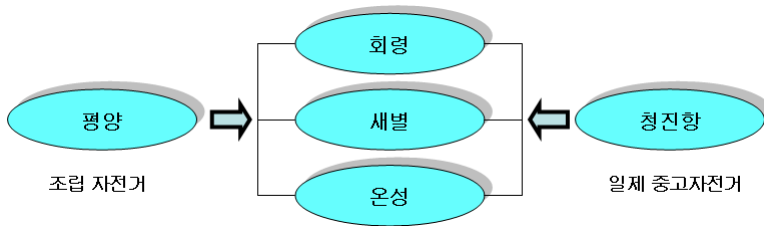
40. 새터민과의 인터뷰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순간 지역간 유통을 개시시키게 된다.

가령, 함경북도의 경우 자전거의 유통경로를 보면, 두 가지 경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향은 평양으로부터의 유입이다. 이는 평양내 공장에서 조립하는 자전거가 대부분이다. 다른 방향은 청진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본제 중고 자전거이다.

〈그림 1-4〉 자전거의 유통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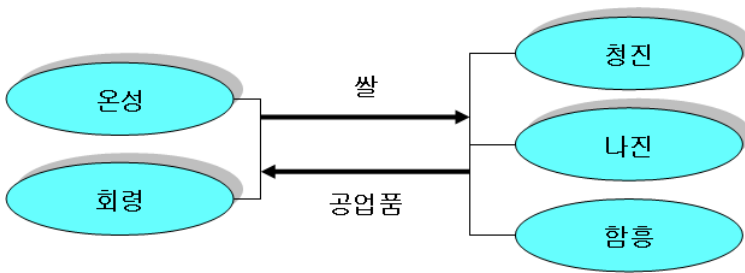


자전거의 유통 경로에서 평양의 조립식 자전거는 함경북도의 회령, 새별, 온성 등과는 거리가 멀기도 하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청진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일제 중고 자전거가 훨씬 더 장사꾼들에게 매력적이다. 따라서 청진항뿐 아니라 원산항과 흥남항 등으로 들어오는 일제 중고자전거는 화물차로 황해남도 해주까지 유통이 된다.

한편, 쌀과 공업품의 유통과정을 보면, 함북 온성, 회령의 쌀은 청진, 나진, 함흥으로 팔려나간다. 왜냐하면 청진, 나진, 함흥 보다 쌀값이 저렴하기 때문이다. 이들 함북 지역의 낱알 장사꾼들은 쌀을 이 지

역에 팔아서 자신의 지역에서 값이 비싼 공업품을 사다 와서 되팔기를 통해 이익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양 지역 간의 쌀 가격과 공업품 가격의 변동은 이 지역의 유통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5〉 함경북도 지역의 쌀과 공업품의 유통



앞에서 언급한 ‘달리기 상인’들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은 상품을 전국적으로 유통시키면서 북한 전역에 혈액을 공급하는 이른바 ‘혈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곡물, 채소, 공업품, 식표품 등 다양한 교환 품목 간에 시장 유통의 공간 지리적인 영역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은 확인된다. 가령, 쌀과 공업품 등은 원거리 유통으로 전국 시장 망에 유통되고 있지만, 채소나 간단한 식료들(음료수, 솜사탕, 아이스크림)은 자신의 지역시장에만 유통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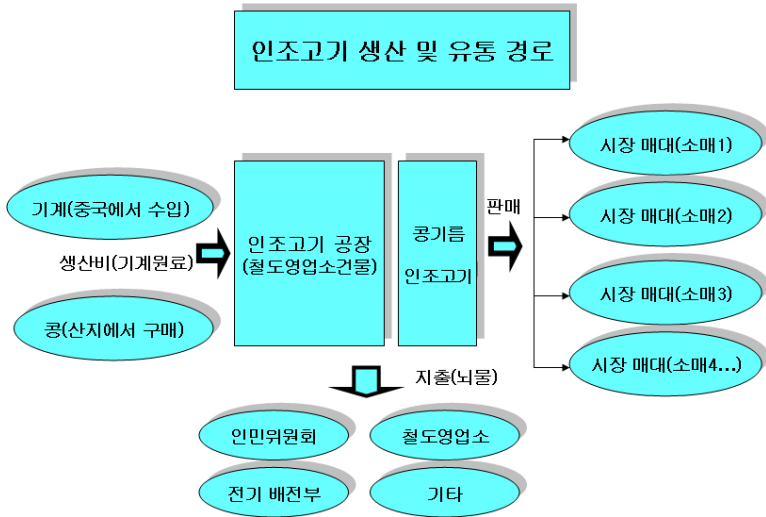
## 2) 미시적 유통구조

여기서는 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유통이 구조화되는지를 살펴 본다. 대표적인 것이 직접 거래와 전문화된 수공업이다. 직접 거래

를 대표하는 것은 술과 두부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가구를 들 수 있다. 물론 술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은 북한에서도 불법이다.

술과 두부를 제조하는 가게는 단골 고객을 확보하여 대량으로 만든다. 따라서 대체로 장마당을 거치지 않고 고객들은 두부 제조업자와 술 제조업자와 직접 거래를 트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단골에는 개별 기업소들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두부와 술 제조업자들로부터 계약하여 자신의 기업소에서 운영하는 가내반에 물량을 넘긴다. 가내반 소속원들은 이 물량을 시장에 소매로 판다. 식품은 현금 치기로, 공업품은 외상으로 결제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경우 현금 치기로 결제한다.<sup>41</sup>

〈그림 1-6〉 미시적 유통 구조: 인조고기 생산 및 유통 사례



41. 새터민과의 인터뷰

위의 그림에서는 전문화된 수공업의 한 부분으로 인조고기의 생산, 유통, 판매의 실례를 살펴보고 있다. 인조고기란 콩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콩두박)을 물을 넣어 다시 가공을 해서 고기처럼 만드는 것이다. 기계는 중국에서 들여온다. 기계설비, 콩 구매, 기타 기관에 고이는 뇌물 비용을 위해서 여러 명이 동업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기계류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하고 기계를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철도영업소 등을 임대한다. 대신 철도 영업소에 일정정도의 이윤을 다달이 납부한다. 전기검열을 피하기 위해서 배전부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인민위원회, 철도합숙사감, 철도역장 등에게도 뇌물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산된 인조고기는 도매상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다시 소매상인인 시장의 매대에 넘기게 된다.<sup>42</sup>

한편, 최근에는 북한 당국이 세금을 받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국영 기업소의 실제 운영권을 넘기고 있다. 서류상으로는 국가소유지만 지배인들이나 당간부들이 기업소의 실질적인 운영권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당국도 적법한 ‘계약일 경우 운영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며, 투자금이나 지분을 강제로 몰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다. 이것은 일종의 민영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을 보장해줄 테니까 직접 투자도 하고 운영도 해서 기업소를 살려보라는 식이다.” 시군급 기업소들의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로 재일교포들과 조교(북한 국적을 가진 중국출생자)들, 그리고 중국과 무역거래가 있는 상인들이다.

---

42. 새터민과의 인터뷰

이들은 ‘달러 동원력’이 있다. “이전에도 기업소들이 개인업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는 일이 간혹 있었다. 하지만 지배인들이나 간부들이 투자금을 떼먹는 경우가 많아서, 기업소에 돈을 대려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국가가 ‘계약대로 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이다.”<sup>43</sup>

개인업자들의 활동이 가장 활발한 곳은 해안 지역의 ‘수산사업소’이다. 수산사업소들은 개인업자에게 선박이나 어장을 대여해 줄 뿐 아니라, 어업도구도 대여하고 있다. 연근해의 고깃배들은 90% 이상 개인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sup>44</sup>

개인들이 급양(給糧)관리소에 돈을 주면 변두리 지역에 ‘국영식당 분점 운영권’을 내주고 있다. 국영식당들은 해당지역 급양관리소에서 관리 통제한다. 급양관리소들은 ‘인민들을 위해 분점식당을 더 많이 만든다’는 구실로 영업권을 개인에 판다고 한다. 분점의 영업권을 가진 개인은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면서 이익의 일부를 급양관리소에 바친다.<sup>45</sup>

한편, 국영상점들이 개인들에게 돈을 받고 상점의 매대를 대여해준다. “요즘은 상업관리소에 돈을 바치면 국영상점의 매대(판매대)를 임

---

43. 새터민과의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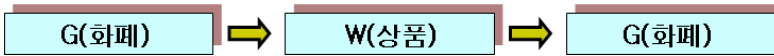
44. 함남의 수산사업소에서 일했던 사람은 작은 고깃배를 운영하는 데 조선돈으로 100만 원가량이 필요. “지금 북한의 수산사업소들이 보유하고 있는 고깃배들은 모두 개인들이 운영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길이 6-7미터, 폭 1.5미터 정도의 목선(木船)이 조선돈으로 20만 원쯤 한다. 여기에 중국산 디젤 엔진을 올리는데 조선돈으로 35만 원쯤 든다”. 연근해 어업용 선박값은 최소 50만 원 이상이다. 현재 북한 당국이 공시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평균월급이 2,500원에서 3,500원 사이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큰 액수다. 물론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했다고 해서 개인소유의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모든 선박은 국가소유(수산사업소 관리). 각 선박마다 선박의 소유를 알리는 간판이 다 있다. 사업소들은 이 간판을 개인들에게 빌려주고 매달 일정액을 선박 운영자에게 걷는 식이다. 결국 간판값이 100만 원이 넘는다는 이야기.

45. 좋은벗들, 앞의 책

대받을 수 있다. ‘자릿세라고 할 수 있다. 처음 매대를 얻을 때 돈을 내고 장사를 해서 이익이 나면 세금을 낸다. 아직도 공식판매원들은 있다. 하지만 국가기업소들이 생산을 못하니까 국영상점들도 판매할 물품들을 확보하지 못한다. 국영상점은 텅텅 비어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에게 자릿세라도 챙길 요량으로 매대를 임대해주는 것이다.’<sup>46</sup>

모든 “사회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소비한다”(K. Marx). 그러나 북한에서는 ‘생산’의 영역이 없다. 소비의 영역만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교환의 영역을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경제는 생산이 정지되어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의 70-90%는 중국産이다. 대부분 유통을 통해서 수익을 갖거나 생필품을 구한다. 따라서 북한 시장의 유통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 형식을 갖는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7〉 상인들(돈주 중심)의 유통: 화폐⇒상품⇒화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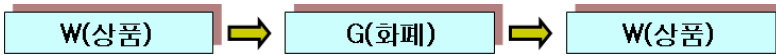


무엇보다도 이것은 유통의 첫 출발이 ‘생산’이 아니라 화폐를 가진 돈주, 되거러 장사꾼 혹은 보따리 장사꾼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의미다. 그리하여 일반 소매 상인으로 넘겨주어 차익을 남기게 되면 첫 단계는

46. 새터민과의 인터뷰

완료된다. 이들은 다시 화폐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때에만 화폐를 지출한다.

〈그림 1-8〉 일반 인민들의 유통: 상품⇒화폐⇒상품



이에 비해서 일반 주민들은 상품을 가져와 팔아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물물 교환하거나 원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 화폐를 획득한다. 그들은 결국 상품에서 출발해서 상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도 역시 결국 이 중에서 중개인, 되거리 장사꾼은 번영을 구가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듯 북한의 시장 유통 구조는 생산 없는 시장경제의 속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유의 시장경제 속에서 북한 인민들 누구나 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시장은 북한 역사의 커다란 흐름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아무리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도 북한 시장경제라는 사다리의 한 칸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 4. 북한 시장경제의 성격

여기서는 지금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 보았던 북한의 시장경

제의 특수성을 정리하고 그러한 시장경제 속에서 화폐와 수령의 관계, 나아가서는 화폐와 사회, 그리고 사회관계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 1) 북한 시장경제의 특수성

현 시기 북한의 시장경제가 갖는 특수성은 첫째, ‘생산이 없는 시장경제’라는 것이다, 즉 물질적 재생산과정의 부재하다는 점이다. 돈주나 국가가 보호하는 기관이나 회사처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윤의 창출과 축적, 확대 재생산을 유도하는 교환이 없는 생존 차원의 장터 개인주의적인 성격을 갖는다.<sup>47</sup> 이것은 완곡하게 표현하면 단순상품생산이라는 토대조차도 미약하다는 것이다.

‘생산없는 교환 체계는 북한 시장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정치체제의 필연적인 변화를 유발한다. 그 경로를 간단히 보면, 북한 국내의 ‘무(無)생산은, “화폐 ⇒ 상품 ⇒ 화폐 ⇒ 상품…”의 단순화 교환 과정만을 가속화시켜, 이 속에서 외국 상품의 되거리 유통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려는 욕망을 키우게 된다. 이는 외국 상품과, 이를 획득할 수 있는 외화의 획득을 부추기며, 국내에서 脫수령화 과정을 가속화시킨다. 이른바 수령 권위의 하락이 결과한다. 수령의 정치적 권위는 이제 화폐 속으로 들어앉게 되며 이로써 화폐 경제는 화폐속의 수령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러한 화폐 경제는 인민들이 생존을 위해서 교환해야만 하고, 교환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일반적 교환

---

47.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년.



의 매체로서 화폐에 대한 물신성(物神性)이 발생한다.

재화의 분배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내부의 규칙(수령제를 내세운 사회주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동체들 안에서 자유로운 화폐 거래가 성립되기 어렵다. 따라서 대외무역에서 화폐 거래가 활발한 이유가 된다. 대외 무역은 공동체들의 규칙이 직접 적용될 수 없는 상업적 공간이다. 그런 규칙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북한 시장경제의 두 번째 특징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시장 경제'에 대한 상부구조적인 제도가 불비(不備)하다는 점이다. 개별 상인이나 수공업자들, 그리고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이익을 확보하고 생존을 구가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을 시장적으로 통합해 낼 제도적 기제들은 확충되지 못하고 있거나 답보 상태에 있다. 이로써 시장적 행위들은 공식적으로는 '시장관리소'내에 한정되어 있으나 시장 활동은 '전국시장'으로 광역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은 시장적 행위들이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타고 있다. 특히 특정 지역의 시장에서 다른 지역의 시장으로 이동하고 유동하는 것이 법적으로 대단히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여행증) 실질적인 시장 활동의 광역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것은 다시금 전국적인 상품의 공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북한 시장경제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시장경제의 세 번째 특징은 외부의 공급원(외국 상품 수입)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항상적인 공급 부족의 시장 위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첫 번째 특징인 '생산없는' 시장경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내부의 생산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따라서 이는 북한의 시장경제가 국제정치적 사안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항상적인 공급 부족은 또한 특정 상인들에게는 기회의 공간이기도 하며, 공급 부족에 따른 시장 주체들 간의 빈부격차를 증가시키게 되며, 특정한 부의 집적이 소수에게 작용하도록 만든다.

북한 시장경제의 네 번째 특징은 상업자본이 주체가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산업자본 자체가 불법화되어 있는 현행 북한의 제도적 조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상업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한 생산없는 시장경제, 산업없는 시장경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내부 공급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 2) 화폐와 수령: “화폐 속의 수령”

북한에서 상인들은 생존의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 한 명이 열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sup>48</sup> 그 열 명 중에는 당 일꾼, 행정일꾼, 보위부, 철도까지 가면 열 명이 된다는 것이다. 상인들이 장사 한번 하려고 움직이려면 그렇게 돈을 뿌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열 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이다.

국경을 따라 중국을 넘나드는 상인들에 의해서 화폐의 거래가 활발해 졌으며, 국내 시장 내에서도 이러한 화폐 거래는 확산되었고 정착되었다. 왜냐하면 생산 없는 북한의 존재로 인하여 상품의 유입이 국외로부터 끊임없이 쇄도하면서 화폐 거래의 연쇄도 한 순간도 중단

---

48. 좋은벗들, 앞의 책.

없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화폐 거래의 확산과 정착이 이루어진 한에 있어서는 교환가치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 필요한 시점에 직면했다. 교환가치의 공식적인 불인정이 현실의 북한 시장경제에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며, 이것이 불법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

형태상으로만 볼 때, 화폐는 당연하게도 북한 사회가 시장경제로 이행하기 오래 전부터(혹은 해방 이후) 존재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전의 화폐는 ‘교환의 등가물’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했는데, 이른바 ‘교환되지 않는 화폐들(M.Weber)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화폐는 교환수단이 아니라 계산수단 혹은 경리나 관리에 필요한 가치척도였는데, 따라서 “경리나 회계는 있었지만 본격적인 의미의 화폐는 없었던 셈”이다. 하지만, 교환수단으로서 화폐의 사용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데, 가령 장마당이나 암시장의 경우가 그러했다. 이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한정적이었다.

일반적으로 시장경제는 화폐경제와 동의어로 쓰일 만큼 시장과 화폐의 관련은 긴밀하다. 근대적 의미에서 시장경제는 화폐를 통해서 상품을 거래하고 채무를 지불하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화폐를 없애겠다는 특정한 소재적 화폐만을 없애고자 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현실 사회주의 사회의 권력 담지자들은 ‘소재주의적 화폐론자들’이라 할 수 있다. 사실 화폐는 인간관계이자 사회관계이다. 화폐를 통해 상품을 거래하고 채무를 지불하는 시장은 인간의 집적 장소이며 의사소통의 장소이다.

기존까지 북한에서는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는 비난받아 왔다. 하지만 현 시기 북한은 화폐에 대한 욕망이 현실적이고도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 첫째, 배급제도의 붕괴로 인한 생계수단의 확보를 위해서 화폐 확보는 필수적이 되었다(구매력 확보의 불가피성). 둘째, 비의도

적인 “시장경제”의 발전으로 인해 생존은 시장과 화폐를 경유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셋째, 2002년 7.1조치 이후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각종 세금제도가 현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국가 수납금이 현물이 아닌 화폐로 대체되었으며, 각종 매대와 자릿세 등 세금 형태의 납부금들이 화폐로 대체되었다. 인민들은 이전에는 쉽게 받을 수 있었던 국가의 도움을 이제는 화폐를 내야만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화폐를 구해야 한다. 화폐가 사회뿐 아니라 경제의 중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으로 반입되어 교환을 기다리고 있는 상품은 질적으로 기능적으로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의 가치척도가 필요하게 된다. 화폐가 등가교환을 매개하며 움직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증여 체제에서는 필요하지 않았던 가치에 관한 불확정성의 원리가 발생하게 된다. 시장은 이러한 불확정성을 매개하면서 확산된다. 이제 북한의 인민들은 시장의 주민이 되는 셈이다. 이러한 시장적 조정 국면에서 북한의 사회는 사용 가치가 아닌, 교환 가치를 중심으로 관계가 형성된다. 공장으로부터 생산된 상품은 시장에서 교환됨으로써 시장 신호에 반응하여 그로부터 교환가치를 통해 인민들 간에 매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상인’이 되는 사회(A.Smith)로 진입한 것이다.

이제 화폐, 수령, 인민, 그리고 사회 간의 관계를 기술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북한의 권력과 상부구조의 성격은 ‘형용적인’ 표현으로 ‘전제정치’, ‘독재’, ‘개인숭배’, ‘술탄’ 등으로 표현되어 왔으며, 이것은 사실상 경제적 토대인 시장 및 시장경제를 분석하고 기술하는 데 장애물로서 기능해 왔다. 심지어는 앞에서 언급한 북한의 권력에 대한 ‘형용적’ 표현에 따르면 이러한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시장경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부구조의 속성에 상관없이 혹은 불구하고 경제적 토대는 시장경제일 수밖에 없다. 아마도 수령과 화폐의 공존상황이 연구자들에게는 용납되지 않는 무의식으로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수령과 화폐의 공존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는데, 그러한 공존이란 기존의 수령의 역할이 화폐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령이 화폐에 대해 갖는 역할과 기능에 따라 사태를 분석해야만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서 화폐는 일종의 ‘세속화된 수령’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령에 대한 믿음이 화폐로 치환되었다는 의미이다. 화폐는 수령을 대신하는 신앙이 된 것이다. 수령이 화폐 속에서 화폐를 정당화하는 신이 된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에서 “화폐는 세계의 세속적 신이다”. 화폐에 대한 신앙이 실제의 화폐보다 더 중요하게 되었다. 수령을 밀어낼 수 있는 인식론이 생긴 것이며, 시장경제를 떠받치는 사회학이 탄생한 것이다. 지폐에 ‘수령’이 찍혀 있으므로 수령이 공인한 화폐가 되는 것이며, 화폐는 수령의 공인을 통해서 시장경제를 관장하고 있다.

북한 권력이 의도하는 ‘교환가치의 전반적인 확산을 도모하는 그러한 화폐 없는 상품교환 체제’는, 마르크스를 인용할 때, 가톨릭을 그대로 둔 채 교황을 없애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교환가치가 상품의 기본 형태로 남아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생산없는 시장경제의 유통을 보장하는 기제인 한에 있어서 화폐를 폐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상품교환 속에 이미 화폐가 내재하고 있다. 이미 계획경제 시절에도 국가계획위원회 위원들의 머리 속에서는 은폐했을 뿐이지 교환가치와 화폐가 들어 있었던 것이다.

짐멜(G.Simmel)<sup>49</sup>의 성찰을 빌면, 북한에서 화폐는 ‘도구적이고 익명적인 상호작용의 증대, 개인적 자유의 확산, 객관적 문화의 확산, 합

리적 지식의 발전, 삶의 유동성 증가 등이 화폐경제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다. 시장은 '개인'의 등장 그리고 '개인주의의 정립'을 유도한다. 그리하여 인민들을 자립화된 주체로 형성해 들어간다. 수령이 사라진 자리를 화폐가 매웠고 화폐는 인민들을 자립적인 주체로 호명하였다.

북한역사에서 시장과 교환은 극히 주변적인 것이었으나 고난의 행군 이후에 와서 주변적인 성격에 불과했던 시장과 교환은 사회 전면에 나서게 되고 현재는 사회 자체를 재조직하였다. 이것은 어떤 중심 명령자(centerless coordination) 없이 이루어진다는 데에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시장과 시장경제의 발전은 '사회'(시민사회적인 것)와 '개인'(주체로서의)을 성립시킨다. 이전의 관료정에서는 '실력자'에게 환심을 사야만 되었지만, 이제는 '실력'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다. 다소간 별개였던 타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이제 불가피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며 소통을 하게 되었다.

시장은 속성상 다원화된 사회를 지향하게 된다. 기존의 계획 관료정 체제에서는 유일적 인민 등의 특정한 사회적 아이덴티티(identity)를 동반했지만, 시장에서의 교환에서는 각 거래 당사자간에는 이념적 정치적 혹은 그 어떤 가치 성향에 대해 동의하거나 알 필요가 없다. 즉 익명화를 통해서 개인들은 자립화를 한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의 말을 빌면, 시장을 통해서 화폐는 “서로 불가능한 것들을 입 맞추게 하는” 힘이었다. 화폐는 사회적 가치들의 단일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에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다. 시장, 보다 구체적으로는 화폐경제는 모든 이들을 모든 다른 이들과 생각하기조차 힘든 정도의

---

49. 게오르그 짐멜 지음, 안중섭 외 옮김, 『돈의 철학』(서울: 한길사, 1983)을 참조.

복잡성으로 얽히게 만든다. 짐멜의 성찰을 빌면, 북한에서 시장은 “수천 개의 사회학적 실타래들의 망”(web of a thousand sociological threads)이라는 부가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권력은 의도치 않게 인민들에게 화폐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북한에서 화폐는 인민들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결국 인민들은 화폐의 의미를 변화시켰다. 결국 수령은 화폐 속에 들어가 내재함으로써 화폐의 교환가치를 정당화시키는 ‘수령’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놀랄 만큼 엄청난 단절을 가져왔다. 시장의 지배, 시장경제의 고착화라는 현상은 이제 북한 사회에서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로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북한에서의 화폐는 국가와는 자율적으로 존재하는 흐름을 갖는다. 즉 북한에서는 화폐의 교환과 송금, 보관, 대부, 지불, 결제 등에 관련된 은행업과 금융업 및 기타 신용제도, 그리고 이들로 이루어진 화폐시장이 국가의 강력한 방해로 존재하지 않아왔다. 왜냐하면 북한 국가는 ‘화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다. 즉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하는 공동체적 관계와 화폐적 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에서 화폐는 새로운 공동체를 창출하고 있다. 화폐경제, 즉 시장경제에 진입하는 과정은 과거 공동체의 연속적인 발전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급작스런 단절이자 붕괴이다. “화폐에 문을 열어준 모든 오랜 건축물은 조만간 지금껏 가지고 있던 균형을 상실할 것이고 그때부터 통제가 잘 안 되는 힘을 발산하게 될 것이다.”<sup>50</sup>

---

50.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1-2』, 626쪽.

## 소결: 불가역적 과정으로서의 시장경제

사실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경제 체제의 작동이 사회의 나머지 부분에 단순히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결정지어 버린다(삼각형의 변의 길이가 각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각도를 결정짓는 것처럼). 시장은 상호행위를 더욱 격화시키고 의사소통을 전례 없이 강화시킨다. 상호행위는 행위와 대항을 양극으로 하는 하나의 전체적인 행위이다. 상호행위는 다시 다른 상호행위를 불러내며 불러들여서 무제한의 연쇄를 만들어 낸다. 상호행위 속에서 사람은 물건을 이동시키고 동시에 관념과 상념을 이동시킨다. 사람들은 물건과 관념을 서로 이동시켜 교환하면서 그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사회구조를 만들어 낸다. 이러한 상황이 북한에서는 이미 90년대에 발생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시장경제의 진전은 전혀 다른 세계로 가는 입구이자 기존의 사회로부터의 출구가 된다. 북한에서 특정 객체(배급품 혹은 기타 생필품 등)를 판매한 대가로 얻어지는 화폐의 수취는, 즉 어떠한 소유물을 화폐로 전환시키는데서 ‘해방’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본에 북한 주민들은 특정한 소유물의 사용가치만으로 살아가도록 강요되었는데, 어떤 소유물이 판매를 통해서 화폐로 전환함으로써 그 화폐의 구매 가능성은 인민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영역을 창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의 형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민들은 ‘주머니의 화폐와 함께 자유로워 졌다’는 측면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북한 주민들은 모든 가치를 시장경제 속에서 화폐 가치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받는데, 이는 결국 화폐 가치가 유일



하게 타당한 가치로 보이게끔 만들어 버린다. 북한 주민들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가”(사용가치의 문제)라는 질문 대신에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교환가치의 문제)에 관심을 두어야만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시장은 근대성의 발달과 궤를 같이 하므로 시장의 가속적인 발달을 가로막는 그 어떤 방해물도 용납하지 않는다”.<sup>51</sup> 어떤 면에서 보면 “시장이 북한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것은 불가역적인 성격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를 전망하자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 경로가 있을 것이다. 첫째, 경제의 퇴행적 시기에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상업자본의 담지자, 즉 돈주 혹은 전주가 상부구조의 시장경제 정책에 의해서 산업자본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는 아래로부터의 자연발생적인 흐름을 수용한다는 점에서 권력이 불 때 불확실성과 사회에 대한 통제에 대한 이완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둘째, 북한의 권력이 어떤 경우에도 통제할 수 있는 국가관료계급에게 국가자산을 불하함으로써 산업자본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른바 ‘국가 부르주아지의 창출’인 셈이다. 이는 국가 통제 속에서 자본축적을 감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그만큼 재정적인 뒷받침뿐 아니라 국가의 야만적인 개입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독재의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국가관리의 시장경제’로의 경로도 모색 가능하다. 국가가 시장경제적 정책들을 통해서 기존의 흐름을 합법화하되 현재의 정치시스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여 통제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북한 시장경제를 관리하는 것이다.

---

51.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1』, 27쪽.

현재 북한의 국가는 시장경제체제의 형성에 적극 참여하거나 이른바 ‘게임의 법칙’을 설정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특정한 경제 활동 참여자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의 시장경제는 국가의 적극적 역할 없이, 좀더 솔직히 말하면 국가의 실패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번성하고 있다. 현 시기의 시장경제가 좀더 적극적으로 국민경제의 활성화를 주도하려면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되는 시점에 있다.

구소련의 경우, 1987년에 ‘개인적 노동활동법’이 시행되어 계획경제와는 이질적인 가내수공업이나 생활 서비스 부문의 개인 기업이 장려되었다.<sup>52</sup> 구 소련의 이러한 정책이 구 소련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별개로 한다면 사실상 북한에서 이러한 류의 정책은 시대의 요구사항이라고 할 만큼 인민 생활에 대단히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의 작동을 효과적으로 보증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행정경제의 전 체제와 정치제도의 내적 활동들을 광범위하게 민주화시켜야 할 것이다. ‘사회주의’ 담론으로 무장하여 부패와 수탈을 일삼는 관료 기구의 대 사회적 기능을 축소시켜야 하며 자치와 대의제적 권리들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만약 사회주의 원칙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불법의 영역으로 치부되고 계획적 구조가 강조된다면 의도하지 않게 복수의 경제제도가 병존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는 뇌물과 합리성이 공존하는 메커니즘으로서

---

52. 이 법률을 통해서 1988년 4월에 총 37만 명이, 1989년에는 73만 명이 이 부문에 노동자로 고용되었다. 西岡俊哲, “ソ連流通における個人企業とコーペラチフ”, 『阪南論集 社會科學編』第26卷 第1號, 1990.

작동할 수밖에 없다. 현재로선 이러한 국가의 퇴행적인 개입은 이미 사망선고를 받고 사실상 집행유예 상태에 있으나 잔존력은 매우 강한 상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불편한 공존상태는 시장과 시장경제 쪽으로 방향을 잡아 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시간의 문제이며, 속도의 문제이다.



제3장

## 북한의 시장교환과 주민 경제 생활





## 제3장

⋮

# 북한의 시장교환과 주민 경제 생활

## 1. 사회적 교환질서와 사회적 관계

### 1) 북한사회의 변화와 시장교환의 관계

1990년대 심각한 경제난은 국가의 물질적 기초가 되었던 계획-재분배 체계의 붕괴를 의미했다. 사회 각 층위에서 시장교환이 '생존'의 방편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개설은 시장교환의 확대가 가져온 사회적 압력에 대한 국가의 반응이자 현실적 타협의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이미 현실화되어 있는 시장교환을 적극적 개입을 통해 국가의 통제영역 안에서 관리해 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교환이 북한사회의 변화를 감지해 낼 수 있는 중요한 척도로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

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기존의 물질적 재분배 체계, 정치적 재분배 체계, 그리고 도덕담론이 결합하여 형성하였던 통합메커니즘 속에서 시장교환이 갖는 위상의 문제이다. 다시 말해 기존의 통합메커니즘에는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사회적 교환질서가 내장되어 있었다. 교환형태로 보면 호혜, 재분배, 시장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교환형태의 공존 속에서 시장교환이 갖는 위상의 변화이다.

둘째, 현재 적극화된 시장교환이 사회적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시장교환이 기존의 지배적인 교환질서와 갈등·대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공존·결합해 있는가 하는 물음에 해당한다. 시장교환을 '생존'의 방편으로서 물질적 공급과 순환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장교환이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사회와 분리된 채 돌아가는 추상의 실체가 아니라 현실에서 개인들의 사회적 동기를 통해 실천되는 사회 안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기존에 북한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고 구성해 왔던 지배적인 사회적 교환방식과 질서가 어떻게 시장교환과 상호작용을 하는가를 보는 것이다. 한 사회의 지배적인 교환방식에는 다양한 정치적 지배 논리와 도덕담론, 생존 논리, 그리고 물질적 재분배의 논리 등이 내장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사회의 변화와 시장교환에 대한 이해 역시 이러한 기존의 지배적 교환방식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볼 필요가 있다.



## 2) 사회적 교환형태와 북한체제

‘사회’란 개인들 사이에서 형성되고 진행되는 사회적 상호작용들과 그 형식들이다. 사회는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며 개인들 역시 사회의 유기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만으로 취급될 수 없다. 사회는 유동적이고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건이며 실재하는 것은 사회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이다.<sup>53</sup>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사회는 실재하는 고정적인 어떤 대상이 아니라 개인들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sup>54</sup> 이 개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을 위해 행하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인식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것이 통칭하여 ‘사회적 관계’라고 한다.

이와 같이 행위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관계는 일정한 교환관계를 전제로 한다. 다시 말해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구성되는 것은 그 사회가 어떠한 교환의 동기와 형식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맺는가에 달려 있다. 이처럼 “교환은 관계들 속에 종속되어 있는 것”<sup>55</sup>이며, 특정 집단과 공동체, 국가 등은 모두 지배적인 교환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의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sup>56</sup> 이런 교환의 내용물은 물질적인 것, 명예나 지위, 충성과 정치적

---

53. 게오르크 짐멜, 김덕영 외 옮김, 『짐멜의 모더니티 읽기』(서울: 새물결, 2005), p. 282.

54. Roy Bhaskar, *The Possibility of Naturalism* (Harvester: Hemel Hempstead, 1989), p. 28, 41. Margaret Archer, Roy Bhaskar, Andrew Collier, Tony Lawson and Alan Norrie, *Critical Realism: Essential Reading II) Critical Naturalism and Social Science* (London·New York: Routledge)

55. 베아트리스 데코사, 신은영 옮김, 『노동·교환·기술』(서울: 동문선, 1999), p. 80.

56. 국가조직, 경제조직, 군대조직, 노동조직 등과 같이 비교적 고정적인 대상, 즉 특정한 사회체들은 개인들 사이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객관적 구조물로 응축되거나 결정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역시 사회적 관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며 특정한 사회적 관계가 관철되는 체계라고 볼 수 있다.

보상 등 다양할 것이다. 결국 사회적 관계는 일정한 교환 형태를 통해 형성되는 관계의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개인, 집단 및 공동체, 그리고 국가 등이 기반하고 있는 교환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호혜(reciprocity)’, ‘재분배(redistribution)’, ‘시장(market)’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호혜(reciprocity)’는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증여(gift)-답례(count-gift)라는 호혜적 교환을 일컫는다. 일종의 ‘선물의 정신’<sup>57</sup> 또는 ‘선물의 경제(gift economy)’ 원리가 내장되어 있다. 상호성을 특징으로 하는 증여와 답례는 등가일 필요도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지만, 답례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sup>58</sup> 선물을 주고받는 속에서 만들어지는 평화는 궁극적으로 이들 간의 호혜에 입각한 안정을 부여한다. 하지만 답례에 응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따돌림을 당할 정도로 공동체의 구속이 강하고 배타적인 형태를 갖는다. 또 증여와 답례 사이에 존재하는 부등가 교환은 일종의 ‘선물의 정신’을 통해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위장되며, 나아가 지배-피지배의 관계를 호혜적인 선물의 교환관계로 포장함으로써 지배논리를 은폐하는 구실을

---

57. 마르셀 모스(Marcel Mauss)는 ‘선물은 외관상으로는 자유롭고 무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강제적이며 타산적인 것’이라고 본다. 선의(善意)의 증여로 포장된 ‘선물의 정신’에는 선물 제공의 의무, 받아야 하는 의무, 답례해야 하는 의무 등이 내장되어 사람과 사람을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선물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고 때로는 결속력과 우정이 유지된다.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선물이 자신의 세 가지 경제 체계 모델, 즉 상호호혜, 재분배, 시장 중 첫 번째 모형의 주요 특징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일반화를 한 단계 더 진전시켰다. 폴라니는 호혜성을 의례적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적 의무에 기초한 재화와 용역의 순환이라고 보았다. 마르셀 모스, 이상률 옮김, 『증여론』(서울: 한길사, 2002); 나탈리 지몬 데이비스, 김복미 옮김, 『선물의 역사』(서울: 서해문집, 2004); 칼 폴라니, 박현수 옮김, 『거대한 변환: 우리시대의 정치적·경제적 기원』(서울: 민음사, 1991).

58.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권기돈 옮김, 『탐구 2』(서울: 새물결, 1998), p. 271.

하기도 한다.

둘째, ‘재분배(redistribution)’는 부족적 공동체보다 확장된 국가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교환의 관계이다. 국가는 많은 수취를 위해 노동력 재생산을 보장하고 생산력을 높이는 것을 통해 생산된 생산물을 중앙으로 이전하고 이것을 재분배한다. 재분배에는 이른바 수탈-재분배라는 교환의 과정이 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착취적 지배는 치자(治者)와 피치자(被治者)의 호혜적인 관계로 가장된다. 이를 통해 국가는 도덕적 선(유교의 ‘治世者의 德’), 이성적인 실체, 보호자 등의 위치에 서게 되고 주민들은 선의와 보호의 대가로 ‘충성’과 ‘노동’으로 보답하는 교환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재분배 교환관계 속에는 물질적 순환과 정치적 지배관계가 맞물려 있다.<sup>59</sup>

셋째, ‘시장(market)’은 개인과 개인, 공동체와 공동체, 국가와 국가 사이에 행해지는 상호 합의에 따른 교환을 일컫는다. 서로 등가라고 생각했을 때 교환이 이루어지고 교환에는 잉여 가치, 즉 자본이 발생한다. 등가를 가장한 부등가 교환이 일어나는 것이다.<sup>60</sup> 시장교환 관계는 국가를 넘어 합리적 계산자인 개인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이 시장교환은 사유권을 보장하고 사유권 보장을 통해 과세(수탈)를 챙기는

---

59. 지속적인 수취를 위해 수취자는 피수취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국가의 원형이다. 국가는 계속해서 더욱 많이 수탈하기 위해서 재분배에 의해 토지와 노동력의 재생산을 보증하고 관개 등의 공공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한다. 그 결과 국가는 수탈기관으로 보이지 않게 되고, 오히려 농민이 영주의 보호에 대한 답례(의무)로 공물을 바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며, 상인도 교환을 보호해준 답례로 세금을 낸다. 그 때문에 국가는 초계급적이고 ‘이성적인 것처럼 표상된다.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송태욱 옮김, 『트랜스크리티크: 칸트와 마르크스 넘어 서기』(서울: 한길사, 2005), p. 43.

60.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송태욱 옮김, 『일본 정신의 기원 언어, 국가, 대의제, 그리고 통화』(서울: 이매진, 2003), p. 43.

국가를 전제하며, 시장교환은 순수한 계약적 관계에 입각해 있는 것이 아니라 호혜와 재분배와 같은 교환의 원리들을 기반으로 이들 형태들과 공존 및 결합해서 작동한다.<sup>61</sup> 어느 사회에도 순수한 시장교환의 형태만 존재하는 사회는 없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교환 형태들은 한 사회에서 갖는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나 결합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서로 공존한다. 어느 하나만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세 가지 교환 방식은 개인과 공동체, 국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정한 교환의 실천들이 '제도적인 응축'을 통해 나타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제도적 응축'이란 공식적인 제도나 법적 측면을 비롯해 비공식적인 정치적·경제적 관행과 전통적 유습, 사회문화적 정서 등이 교환의 형태 속에 총체적으로 개입해 있음을 뜻한다.

북한사회 역시 호혜, 재분배, 시장의 교환 원리들이 일정한 함수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 내는 역동적인 사회적 공간이다. 외부와 일정하게 고립된 '자립경제' 속에서 국가의 사회보장(수령의 은덕)과 인민이 노동이 교환되는 방식은 '호혜'로 가장되며, 국가에 의한 전체 생산물 중앙이전과 독점적 재분배라는 계획경제 시스템은 수탈을 통한 '재분배'라는 교환을 대표한다. 이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형식 속에는 물질적 교환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배와 통합의 원리들이 함께 작동한다. 수령의 은덕과 노동이 교환되는 속에는 정치적 지배를 호혜적 관계로 정당화하는 기제가 내장되어 있으며, 계획경제의 수탈-재분배 교환 방식 속에는 재분배를 관장하고 조절하는 권력 의지와 함

---

61.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 조영일 옮김, 『근대문학의 종언』(서울: 도서출판 b, 2006), pp. 119-120.

〈그림 3-1〉 세 가지 교환방식(호혜-재분배-시장)으로 본 북한

호 혜	시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립된 공동체 단위('자립적 민족경제')</li> <li>·중여-답례의 교환방식</li> <li>·공동체 구속-배타적 형태</li> <li>·수령-인민의 사회보장-노동 교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개인, 공동체-공동체, 국가-국가 사이의 상호 합의에 따른 교환</li> <li>·등가교환의 외견 아래 부등가 교환·잉여, 자본의 발생</li> <li>·개인은 교환 기초단위, 국가는 제도화 단위</li> <li>·교환이 사회적 관계에 '몰혀'(embedded)있음.</li> </ul>
재 분 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단위 내 생산-재분배(수취-재분배)</li> <li>·생산물 중앙이전-독점적 재분배(계획경제)</li> <li>·국가: 도덕적 선, 이성적 실제, 보호자</li> <li>·정치적 재분배와 연동</li> </ul>	

게 거대한 관료체계가 작동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이 호혜와 재분배 교환방식이 물질적 보장과 재분배를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을 대체·보완을 하는 형태로 은폐된 공간에서 존재해 왔다. 여기서 '대체'나 '보완'이란 시장교환이 나머지 교환 방식을 압도하거나 독자적인 교환체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와 재분배의 사회적 관계에 '몰혀(embedded)'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사회주의 제도화 이후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1990년대 이전까지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을 봉합하고 억제된 인민 소비욕구의 틈새에서 은폐된 형태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계획-재분배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됨에 따라 시장교환이 생계공간으로 전면에 부상하게 되었다.

## 2. 시장교환과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

### 1) 시장교환: '은폐된' 공간에서 '생계' 공간으로

#### (1) 계획경제와 '은폐된' 시장교환

1990년대 이전까지 북한에서 시장교환은 '은폐된' 공간 내에서 존재해 왔다. 과거 시장의 위상과 존재 형태는 크게 ① 국가 축적체계, ② 분배의 위계 구조, ③ 공급부족의 경제 등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다.

#### ① 국가 축적체계와 시장교환

'시장'은 국가 축적을 위해 통제되어야 할 대상이었다. 중공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국내 전체 생산을 국가가 통제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농민시장'으로의 양곡 유출을 막는 것은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자금 이전이란 측면에서 중요했다.<sup>62</sup> 또 인민 생필품과 같은 소비재에 부과되는 '거래수입금'은 공업화를 위한 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농민시장으로의 양곡 유출과 개인적인 소상품 제작·판매는 국가 축적을 위해 통제되어야 했다. 따라서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매의 강화와 국가 상업망의 구축은 사적인 시장교환을 통제하는 중요한 기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현실에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중공업

---

62. 양문수, 『북한경제의 구조: 경제개발과 침체의 메커니즘』(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pp. 159-162.

중심의 노선이 인민 소비품 관련 경공업의 상대적 희생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민들의 다양한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국가 축적을 위한 농업협동화, 국가수매의 강화, 배급제의 실시는 농민을 비롯한 도시민들의 농수산물 및 생필품에 대한 소비 욕구를 억제해 왔다. 이 과정에서 농민시장은 국가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일상적인 물품에 접근할 수 있는 작은 통로 역할을 했다. 물론 극히 제한된 품목만이 거래되었지만, 농민시장이 살아남아 지속된 이유 중에는 이러한 일상적 소비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현실이 있었다.

〈표 3-1〉 농민시장의 시기별 명칭 및 운영방식 변화

기 간	명 칭	개설 빈도
해방~1950	인민시장	상설시장(도시) 3일 또는 5일장(농촌)
1950~1958	농촌시장	매일장(도시) 3일 또는 5일장(농촌)
1958~1969	농민시장	10일(매월 1, 11, 21일)
1969~1982	농민시장	10일(농촌지역) 주요도시 중심지역의 시장은 폐쇄
1982~1987	농민시장	상설시장화(1982) 1985년 5월부터 숫자 확대
1987~1990년대 초	농민시장 (장마당, 야시장 등 명칭 등장)	주일장으로 전환 후 다시 10일장으로 전환
1993~1995	농민시장 (장마당, 야시장, 자유시장 등)	매일장(상설장)으로 전환(1993)
1996~2002	농민시장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심화로 농민시장 기능이 급격히 강화 쌀, 공업품, 농산물 등 거의 모든 물품 거래
2003~현재	종합시장	농민시장을 확대·개편

## ② 사회적 분배의 위계 구조와 시장교환

위계적인 사회적 분배구조와 시장교환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출신성분’과 ‘사회성분’ 등에 따라 인민들을 계층화 했고, 이에 따라 분배 역시 차별적으로 위계화 했다. ‘차별’에는 물질적인 것과 정치적, 사회적인 보상 및 분배가 동시에 작동했다. 이런 ‘차별’은 다양한 재화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의 위계화를 의미했다. 성분과 직업, 가계(家系) 출신에 따라 분배가 차별적으로 제공되었고 위계의 아래로 내려갈수록 기본적인 물질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분배의 한계선상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 농민시장은 사회적 불평등 구조, 차별적인 위계적 분배구조 속에서 인민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작은 창구 역할을 했다.

한편 1970년대 초반부터 북한은 인구 증가 추이에 비례한 식량 생산의 정체에 빠져 들게 되었다. 이때부터 식량 생산이 인구 압력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본격화된 것이다. 전후 베이비붐 세대들이 1970년대 초반 노동 현장에 뛰어들기 시작했는데, 이에 비해 식량 생산은 1960년대 중반 이후 뚜렷하게 늘어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여기에는 그나마 제공되던 배급량 역시 1973년경부터 전쟁미 명목으로 공제되기 시작했다. 생필품 배급사정 역시 악화되기 시작했고 도시주민들의 소비생활도 상대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었다.<sup>63</sup>

이러한 소비생활의 압박은 대체로 위계적인 사회적 분배구조의 하층을 차지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농민시장 내의 교환을 소극적이거나 자극하는 배경이 됐

---

63. 구갑우·최봉대, “‘농민시장’ 형성: 1950~1980년대,”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서울: 한울아카데미, 2004), p. 171.



다. 결국 농민시장이 1970년대를 거치며 미미한 형태이지만 교환의 장소로 생명력을 발휘한 것은 당시 국가의 생산력 정체와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가 갖는 경직성이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sup>64</sup> 이것은 1990년대 극심한 경제난에서 농민시장이 ‘생계의 교환 공간’으로 적극화될 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 ③ 공급부족의 경제와 시장교환

‘부족’은 자원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개별자(공장 관리자들 또는 인민들)가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또는 충분히 그것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한다.<sup>65</sup> 이러한 부족현상은 (물적·인적) 자원의 완전고용, 급속한 성장에 대한 중앙의 강박적 정책, 가용 자원을 넘어서는 과도한 계획, 자신들의 다양한 목적으로 위해 자원을 획득하려는 부문들, 국들, 부들 그리고 지방들의 노력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전반적인 부족 현상은 계획경제의 작동을 더욱 정치화(政治化)했다. 위와 아래, 또 수평적 층위에서 부족을 해소하고 계획목표를 완수하기 위한 정치적 압력과 연줄, 호혜 관계가 번성했다. 이들은 장소로서의 ‘시장(장터: marketplace)’보다는 부족을 메우기 위한 비공식

64. 농민시장 이외에도 도시주민은 기업 수준의 후방공급활동 혹은 폐기발 경작 등을 통해서, 공장 일을 하면서 스스로 식량생산에 참가하여 부족한 식량을 획득하고 있었다. 또한 농민에게는 텃밭에서 곡물 이외의 부식물을 재배하여 농민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다. 농민의 ‘텃밭’, 도시주민의 ‘폐기밭’, 기관·기업소의 ‘후방공급활동’, 도농간의 농수산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농민시장’ 등 공식적인 식량배급체계 이외에 보조적인 식량체계가 제한적인 생산과 교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다.

65. 알렉 노브, 대안체제연구회 옮김, 『실현 가능한 사회주의의 미래』(서울: 백의, 2001), p. 166.

적 ‘교환(exchange)’으로서 자체의 은폐된 가격신호를 만들어 낸다. 생산수단 및 자재의 거래는 불법이었지만 비공식적으로 공공연한 흥정과 교섭의 대상이 됐고 ‘교환’을 위한 가격이 그들 사이에서 작동했다.

## (2) 1980년대까지의 시장교환 억제 요인

앞서 보았듯이 계획경제의 사회적 압력 속에서 시장교환이 ‘은폐된’ 형태로 존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까지 시장교환이 직접적으로 시장의 공공연한 번성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민들이 상대적 빈곤의 격차를 크게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가 작동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주민 차원에서 차별성은 그리 큰 것이 아니었다. 소소한 일상 소비품 중 몇 가지의 공급품목을 더 받거나 덜 받거나 하는 수준이 이들이 느끼는 차이였다. 주민들의 소비생활 자체가 평준화된 까닭에 상대적인 빈곤감을 서로가 덜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 이런 심성들이 ‘시장’이나 ‘상거래’에 대한 국가 통제와 이데올로기적 ‘금기’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생계윤리(subsistence ethic)’에 대한 심성의 변화 차원에서 시장교환의 참여 여부를 볼 수 있다. 생계윤리의 근거에는 더 많은 물질적 보장의 기대보다는 수탈 이후에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되는가 하는 ‘도덕적’ 기준이 자리하고 있다. 국가가 통제하고 금기시하는 시장교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은 급박한 생존에 직면해 취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1980년대까지는 부족하지만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생계윤리는 1990년대 전후 주민들이 시장교환의 참여 여부

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 근본적인 요인은 국가가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 이상으로 현재 이후의 미래가 계속 불안정할 것이라는 좌절이나 공포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 이렇게 살아서 되겠다. 시장에 가서 장사하고 사는 게 낫다, 하루벌이 하는 것이 낫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 농사가 안되고 분배몫이 없으니 장사하는 게 낫다라고 한다.”(탈북자 인터뷰, 함북 무산군 강선로동자구 광산노동자).

셋째, 정보유통과 물리적 이동의 제약이 시장교환의 가능성을 제한했다. 마을 공동체를 넘어선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리적 이동의 자유로움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주민들의 이동을 철저히 통제하는 정책을 펴 왔다.<sup>66</sup> 이런 통제는 마을 내 물물교환 및 상호부조 이상을 넘어서는 물적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힘들게 했다.

또 시장교환은 초보적이거나 일정한 정보 교환을 필요로 하지만, 이동에 대한 정치-행정적 통제, 지역간 수송 문제<sup>67</sup>, 거리의 장소의 제

---

66. 북한은 1960년대 중반부터 3계층 51개 부류 구분사업(1967.4~1970.6), ‘주민 요해사업’(1972.2~1974), ‘주민증 검열사업’(1980.1~1980.12), ‘주민증 갱신사업’(1983.11~1984.3), ‘려행증법’ 제정 등을 통해 사실상 인구와 노동이동에 대한 전반적 통제기능을 확보하게 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1960년대 중반까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던 노동유통과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주민들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목적이었다.

67. 수송은 공식적인 계획을 현실화하는 물리적 이동을 담당한다. 특히 동-서간의 ‘유무상통’의 교환은 사실상 수송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식적인 계획물량의 이동이 원활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지역간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증언은, 강명도, 『평양은 망명을 꿈꾼다』(서울: 중앙일

한, '장사를 부끄럽게 여기는 주민의 경제심성<sup>68</sup>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비공식적 거래와 교환에 필요한 정보가 통제되었다.

특히 수송은 공식적인 계획을 현실화하는 물리적 이동을 담당한다. 이중에서도 동-서간의 '유무상통'의 교환(식량-공업품)은 사실상 수송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공식적인 계획물량의 이동이 원활하

〈표 3-2〉 북한의 통행증 종류와 내용

구분	종류	내용
목적	여행증명서	사적 용무
	출장증명서	공적 용무
제한구역	평양특별시 여행(출장)증명서	평양시 통행
	전연지구 여행(출장) 증명서	휴전선으로부터 40km 이내 지역 통행
	국경연선지구 여행(출장)증명서	국경선으로부터 40km 이내 지역 통행
	도(道)내 여행증명서	거주지역 도내 통행
허가기간	일반여행(출장)증명서	1회에 한정 사용, 보통 1개월 이내
	반복 출장증명서	기간내 무제한 사용, 보통 1개월 이내
	분기 출장증명서	'비서국 비준대상' 간부용, 분기 1회 발급 전연지구 제외한 전지역 통행 가능
교통편	육로 출장증명서	운전수, 차량수송 담당자용, 기차이용 불가
	일반여행(출장)증명서	모든 교통수단 이용 가능

보사, 1995), pp. 185-187. 또 인구유동의 통제와 지역간 고립을 불러온 도시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고성호, “북한의 도시화 과정과 특징,” 『통일문제연구』 제8권 1호 (1996년 상반기호), pp. 147-148, 152-156.

68. 소비생활의 위기가 곧바로 농민시장의 활성화로 연결되지 않는 이유를 국가배급제의 유지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의 빈시장주의적 집합의식으로 보는 의견도 있다. 구갑우·최봉대, 위의 책, p. 176.

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지역간 교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교환이라는 것은 도시와 농민시장, 소규모 마을 공동체 내부, 생산단위들 간의 필요한 것에 대한 유무상 통의 비공식적 ‘거래’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었다.

### (3) 1990년대 이후 생계수단으로서 시장교환의 부상

1990년대 북한에서의 시장교환은 일종의 생계공간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과거 농민시장은 주민들의 배급 의존적 삶에서 소비생활의 보충적 공간이었다. 또 비공식적 ‘교환’ 행위들은 계획경제 내부에 존재했지만, 어디까지나 불확실성을 봉합하기 위한 ‘은폐된’ 것들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계획-재분배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위계적 분배구조에서 최상층을 제외한 대다수의 인민들이 생계의 극단적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교환이 배급을 대체하는 생계공간이 되었고, 계획부문의 대부분이 역시 ‘시장교환’ 없이는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

대부분의 주민이 시장교환에 ‘생계’를 의존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관료들 역시 지위와 특권을 이용 시장공간을 자신과 자기단위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이용하기 시작했다. 위로부터의 자재공급이 없는 속에서 시장을 자신의 계획목표를 봉합하는 데 필요한 물자 공급 경로로 이용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에게 액상계획을 할당하고 노동자들은 시장 활동에서 번 수입의 일부를 자신이 속한 공장에 상납하는 형태로 시장 교환에 의존하고 있다.<sup>69</sup>

---

69. 이석기,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와 기업 형태의 변화: 생존추구형 내부자 통제와 퇴행적 시장화,” 서울대대학원 경제학부 박사학위 논문, 2003, p. 161.

국가 역시 공장 미가동으로 인해 기존의 공업부문 중심의 재정수입 구조가 급격히 축소됨에 따라 2002년 이후 각종 세금항목을 부활시켜 주민들로부터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표 3-3〉 북한의 재정수입 구성 (단위: %)

년 도	1958	1961	1965	1991	1996	2000	2002
1. 사회주의경리수입	93.5	97.9	98.0	100.0	100.0	100.0	100.0
거래수입금	60.0	53.8	55.6	46.5	39.8	43.2	-
국영기업이익금*	12.8	22.1	21.2	39.1	31.0	32.9	77.6
기타	20.7	22.0	21.2	6.8	39.2	23.9	?
2. 원조	4.2	-	-	-	-	-	-
3. 주민세금	2.3	2.1	2.0	-	-	-	?
4.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출처: 북한연구소, 『북한총람』(1994); IMF,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Fact-Finding Report, Nov. 12, 1997; 『조선중앙통신』 2001. 4. 6, 2002. 4. 3; 양문수, 『북한 경제의 구조』(서울: 서울대출판부, 2001), p. 151.

\* 2002년부터는 국가기업리득금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종전의 국가기업이익금에 거래수입금 항목이 통합되었음.

시장을 공식 허용하는 것을 통해 장세를 거두어들임으로써 시장을 재정확보의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또 주민들에게 각종 준조세 성격의 상납을 받고 있어 시장과 주민에 기생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지방도시의 경우 “재정의 60% 이상을 종합시장 사용료와 국가납부금에서 충당”하고 있으며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얽혀살고 있다”<sup>70)</sup>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70. 탈북자 인터뷰 내용(회령시당 민방위부 지도원 출신).

(표 3-4) 주요 준조세 성격의 고정 상납(1995년 이후)

주요 항목	내 용
각종 맹비 (당비, 사로청비, 직맹비 등)	· 임금의 2%, 학생 매월 10천
인민군대지원	· 세대별 농장세대는 연간 돼지 1마리 · '4·25' 인민군 창건일 1인당 곡밥(도시락) 및 세면도구 1조
돌격대지원	· 격월간 1인당 5월-10원과 양권 2장
학교지원	· 학생별로 연간 월동용 구공탄 3장 비롯해 수시로 학교에서 요구하는 물품
농촌지원	· 월간 1인당 인분토 1톤(혹은 10원) · 단, 공장·기업소 노동자는 동계기간(11월-1월, 3월) 인분토 3톤, 학생은 동계기간 중 1톤
탄광지원	· 연간 1인당 장갑 1족(또는 공구 1조)
학교 각 종 잡부금	· 외화벌이운동 '꼬마계획' 일환, 토끼기르기, 나물캐기, 파지 및 고철수집(미달 시 2원 납부) ·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 관련 교사 독려 및 환경미화 등의 명목, 1인당 10~15원 · 신학기 교실 미화 명목, 비품 및 돈 · 졸업 시 학교 남길 기념품 구입비 1인당 10원 · 야영·답사·결학 시 시멘트, 페인트, 술, 담배 징수

## 2) 현 시기 교환질서와 시장교환의 전유

1990년대 경제난은 가족경제의 원리가 각 단위와 개인에게 생존 차원에서 현실적 의미로 전유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계획경제가 더 이상 국가의 도덕담론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사회 전반에 시장교환이 생존 차원에서 확대되는 한편, 사회의 각 층위에서 가족담론이 현실의 '생존' 논리로서 해석되고 실천되기 시작했다. 이것을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sup>71</sup>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비도덕적 가족주의화’는 국가이익보다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위의 이익을 우선하는 질서로 변화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북한의 경우, 최고지도자와 상층 권력집단은 인민경제보다는 정권 보존 차원에서 정치자본과 충성의 교환을 통해 ‘수령경제’의 자원 확보에만 비도덕적으로 몰두하는 한편, 중하층 관료들은 자신과 자기단위의 생존에 몰두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인민들은 집단적 정체성보다는 ‘생계’를 위해 자신의 가족 생계에 몰두한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 세 층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도덕적 가족주의화는 서로 분리된 현상이 아니라 서로 ‘생존’이라는 목적 속에서 연계된 채 작동하고 있다.

- 
71. ‘비도덕적 가족주의(amoral familism)’는 밴필드(Edward Banfield)가 남부 이탈리아 연구에서 개념화 했다. 자신이 속한 소집단(가족, 조직)의 이익과 가치를 국가나 사회 전반의 이익·가치보다 우선시하는 것이다. 밴필드는 후진사회의 저발전 원인을 소집단을 넘어선 관계와 결속, 사회공동체성의 부재로 보았다. 따라서 ‘가족주의’는 부도덕(immoral)이 아닌 비도덕 또는 무도덕(amoral)에 가깝다.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충성심과 가족적 친밀감에 기초하기 때문에 ‘가족’논리의 과잉이며 가족의 통합성은 제공하지만 사회의 연계성을 방해한다. 러시아에서 시장경제 이행, 동남아시아, 남부 이탈리아, 사하라 아프리카, 미국 내 차이나타운, 코리아타운 등에 관한 연구에서 발견된다. Edward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Christopher Colclough, “Structuralism versus Neo-Liberalism: An Introduction,” *States or Market? Neo-Liberalism and the Development Policy Debate* (Oxford: Clarendon Press, 1991); John Toye, *Dilemmas of Development* (Oxford: Basil Blackwell, 1987); Diego Gambetta, *Sicilian Mafia: The Business of Private Protect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3).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무규범’ 현상을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본 연구로는, Bruce Cumings, 『한국현대사』 위의 책, p. 479; 김동춘, “한국의 근대성과 도덕의 위기,” 『근대의 그늘: 한국의 근대성과 민족주의』(서울: 당대, 2000), pp. 94-129 등이 있다.



## (1) 수령경제의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 ① 1990년대 이전 수령경제

‘수령경제’는 공식·비공식적인 대외교역과 국내 생산으로부터 수령이 인민경제 예산 및 지출과 별도로 통치에 필요한 일정한 자금을 확보하는 경로와 사용의 정치적 맥락을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한 개념이다. 즉 외화벌이와 국내에서 생산된 자원과 자금을 당·정·군 기구와 관료적 과정을 통해 수령의 통치자금으로 흡혈하는 일정한 자금경로이다.<sup>72</sup>

이렇게 마련된 통치자금은 1970년대 중반부터 관료집단의 충성을 관리하는 선물비용을 비롯해 계획경제의 ‘걸린 고리’를 현지지도를 통해 돌파하는 데 활용해 왔다. 이 수령경제는 과거부터 수령과 관료 사이의 특수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만들어 왔다. 수령은 통치자금을 통해 관료들의 충성과 지지에 대한 보상으로 물질적 특혜와 함께 관료적 지위, 즉 ‘정치자본’<sup>73</sup>을 배분함으로써 교환관계를 형성·유지해 왔다. 당·정·군 고위 관료층에게 부여된 정치자본은 정치적 지위를 이용한 국내 자원의 일정한 독점적 점유·활용권이나 외화벌이 사업에 대

---

72. 중앙당 재정경제부, 당중앙위원회 39호실, 중앙당 38호실, ‘충성의 외화벌이’, 사금채취, 군(軍) 및 기타 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에 대해서는, 홍 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 동국대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6, pp. 294-306 참조.

73. 정치자본(political capital)이란 관료적 지위와 함께 그것을 보유한 자들에게 ‘공공적 재화(관료들의 공공재화 점유·활용)와 서비스(주택, 자동차, 병원, 학교 등)의 사적 전유(appropriation)’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보장’이란 공식적인 전유의 허용도 있지만 비공식적 방식으로 전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자원의 세습 재산화(patrimonialization of resources)’는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체계에서 두드러진다. 특히 이런 세습은 가족적 관계들의 망(network)을 통해서 전수되기 쉽다. 공산주의적이라기보다는 소련적(Soviet)이라 불러야 할 체계들이다. Pierre Bourdieu, *Practical Reason: On the Theory of Action*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8), p. 16.

한 특권을 통해 경제자본화 되어 왔다.<sup>74</sup>

“지금(1996년 이후) 북한에서 외화벌이 것은 전부 인민무력부에서 권한으로다 댈친다. 외화벌이가 잘 된다는 정보만 있으면, 인민무력부에서 김정일의 비준을 받고 무엇이든 한다. 인민무력부는 외화벌이를 하지 않으면 이미 폐쇄 군대일 것이다. 이 외화벌이로 인민무력부를 먹여 살리는 게 북한 현실이다. 보위부도 그것과 비슷하다.”(탈북자 인터뷰)

중하위 관료들 역시 수령 및 상층 관료들에게 충성 및 물질적 상납을 통해 정치자본과 지위 상승을 교환하는 구조를 만들어 왔다. 수령 경제를 통한 공생관계에는 호혜와 재분배의 교환 원리를 축으로 하는 교환질서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 가. 주요 당기관을 통한 통치자금 조성

##### ㄱ. 중앙당 39호실

39호실은 중앙당 재정경리부 소속이었으나 1989년경 당 중앙위원회 산하 1개 부서로 승격되었다. 조직 규모는 500여명으로 당 중앙위원회 외화벌이 담당으로 볼 수 있다. 1970년대 김정일 당 비서업무를 시작하면서 조직·운영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중고차 중계무역, 금 및 농수산물 수출 등 외화벌이와 위조 지폐, 아편 제조 판매를 통해 김정일 중앙당 비자금 조성을 담당하고 있다.

---

74. 북한에서 외화벌이는 ‘군중외화벌이’, ‘당외화벌이(5호관리부)’, ‘조선인민군 외화벌이’, ‘사회안전부 외화벌이’, ‘국가안전보위부 외화벌이’, ‘연락소 외화벌이’, ‘대성총국 외화벌이(당 39호실)’ 등으로 나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사실상 군(軍)이 자체의 예산확보를 위해 사회 곳곳에 권한을 갖고 외화벌이 수출용 자원을 독점하고 무역에 적극적으로 가담해 왔다.(탈북자 인터뷰 내용).

(표 3-5) 중앙당 39호실 산하 기구들과 사업 개요

산하기구명	사업내용	사업운영
대성총국	·김정일 외화관리국, 대외 무역 담당 ·공장·기업소 운영 및 대외 무역 담당,	·대성무역, 대성은행, 금성은행 등이 소속 ·인삼, 가공품 수출 등으로 당 자금 조성
대성은행	·당 경제 부문 금융결제, 보관업무	·1978년 설립 ·대성무역 산하 무역회사·선박회사 등의 대외결제업무·외화거래 ·금·은 등의 귀금속 거래 ·당 외화자산관리 담당
금강지도국	·금·아연광산 운영 외화별이 ·각종 상사, 제련소, 금광 운영	·금광 - 각 도별로 2~3개 정도 편성 - 함북의 화대금광(화대군), 금바위 금광(청진시) 등 2개소 ·제련소 - 금광에서 채취한 금광석을 제련 - 함경북도 청진시 나남구역 청진제련소 ※ 채취한 금광석은 39호실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직접 관리, 제련소로 이송 후 제련하고 정제된 금은 중앙으로 직송 ※ 지방에서는 각종 금광에서 작업에 필요한 자재, 유류 등을 보장 ·기업소 - 금 채취, 제련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해 각도에 설치 - 함북 청진에 안전모 부착용 안전등을 제조하기 위해 금강화학공장 운영
대흥지도국	·농산물 수출입 담당 ·각종 상사, 5호관리소, 농산물가공공장, 수산물가공공장 운영	·농산물 가공공장 - 각 도별로 1~2개씩 운영 - 함북도에는 청진시 포항구역 산업동에 송이버섯 가공공장 운영 ·수산물 가공공장 - 각 도별로 산출되는 문어, 성게 등 해산물을 가공하기 위해 1~2개 공장을 운영 - 함북도에는 청진시 포항구역에 문어 가공공장 위치 ※ 지방에서는 각종 농·축·수산물 및 지역특산물 수출입 업무
연풍지도국	·합영회사 관장	

\*출처: 정보사령부, 『북한조직편람』(2004) 참조.

39호실에 소속된 대성무역총회사는 산하에 수십 개의 무역상사와 운수회사, 해외지사 및 대성은행을 두고 김정일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다. 외화별이 사업 중 규모가 큰 것은 금광으로 연간 10톤 내지 15톤을 생산한다. 북한의 금광을 통해 얻어지는 외화는 모두가 39호실 김정일 통치자금으로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39호실에서는 각도에 부부장급 간부 등 3~4명 파견되어 있으며, 이들은 산하의 금강관리국, 대흥관리국을 총괄 지휘한다. 각 도별로 금강관리국과 대흥관리국을 설치되어 있으며, 금광이 없는 자강도, 양강도 등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여기서 마련한 금을 제련하고, 중앙으로 직송 하는 등의 업무는 39호실 파견자들이 담당한다.

39호실을 주축으로 하는 당경제에 속하는 공장, 농목장의 수는 약 150~200여 개, 인원은 약 50~6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대규모의 기념비적 건조물과 같은 수령체계의 선전·유지비, 수령의 비밀자금, 대남사업, 그 밖의 전략사업, 그리고 특권층의 소비재 조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 ㄴ. 중앙당 38호실

1992년경 당 39호실이 비대하여 분리된 기구로 주요 임무는 김정일의 혁명자금 조성이다. 38호실과 39호실은 주민들에게 ‘김정일 뒷주머니 담당부서’로 알려져 있다. 이 중 38호실 역시 외화별이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주로 내국의 호텔이나 숙박업, 외화 상품을 거래하는 상업적 유통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창구로 보인다. 1993년경 김정일 당 자금 외화별이를 전담하던 39호실의 고위 간부들이 외화 유용, 착복 등 문제가 발생하여 39호실의 외화 상점과 호텔운영 등 일부 기능을 38호실을 신설하면서 이관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표 3-6〉 중앙당 38호실 산하 기구 및 사업 개요

산하기구명	사업내용	사업운영
향산지도국	· 평양과 각 도·시에 외화상점 운영	· 황금별외화상점, 평천외화상점 등 수십개 운영
묘향산박지도국	· 외화선 6척으로 화물수송	· 연간 미화 300만불 할당, 순이익 150만불
모란지도국	· 낙원백화점 등 외화상점 운영	· 외국상품 되거래
능리무역총국	· 대외국건설 노동자 파견	· 러시아 별목공 파견 · 200만달러 정도 수입
경흥지도국	· 대성백화점 등 외화상점 운영	· 선박으로 외국상품 구입(월1회 정기운행)
고려호텔 봉사총국	· 고려호텔 운영	· 연간 100만 달러 정도 수입
보통강 지도국	· 보통강여관 운영	
철산총국	· 패션 구입, 수리 및 보수 판매	
고려은행	· 산하기관 자금결제 및 외환거래	

\*출처: 정보사령부, 『북한조직편람』(2004) 참조.

〈표 3-7〉 군(軍)이 운영하는 무역회사(1996년 이전)

운영주체	무역회사명
인민무력부* 44부	매봉총회사(무기·군사장비 수출입)
인민무력부 25총국	홍성무역회사, 신탁무역회사
인민무력부 후방총국	용성무역회사
인민무력부 경찰국	비료봉무역회사
인민무력부 적공국	위성무역회사, 칠보무역회사
인민무력부 측지국	밀양무역회사
인민무력부 석재국	석봉무역회사
인민무력부 도로국	은하수무역회사
인민무력부 체육위	붉은별무역회사
총정치국	백봉무역회사, 백로무역회사
총정치국 문화기재 공급소	문화봉무역회사
총참모부 작전국	강성무역회사, 밀영무역회사
공군사령부	단풍무역회사, 2·6무역회사, 버짚무역회사, 보통강무역회사
해군사령부	삼해무역회사
보위사령부	신성무역회사, 수정무역회사(→장생무역회사)
호위사령부	송화무역회사, 청운산무역회사
호위사령부 후방국	화성무역회사
고사포사령부	청송무역회사
평양방위사령부	백양무역회사
군수동원총국	용흥무역회사, 어은무역회사
금강산발전소	오봉무역회사

## ② 1990년대 이후 현 시기 수령경제의 작동방식

1990년대 경제난은 수령경제의 자금경로를 위협하는 상황변화였다. 국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됨에 따라 외화벌이 사업 확장을 통해 수령경제의 물질적 기초를 유지하는 전략이 사활적인 문제가 되었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도 외화벌이를 통한 수령경제의 자금 확보는 중요한 경로였지만<sup>75</sup>, 달라진 것은 외화벌이 창구를 좀 더 아래단위까지 확대·허용하고 일정한 상납구조를 형성한 것이다.

가령 1991년 '새로운 무역체제'가 등장하면서 각 시·군은 도(道)와 긴밀한 협력 하에 수출 원천을 스스로 찾아 외화를 벌여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 받았다. 도 무역관리국의 은행계좌도 독립되었다. 중앙은 각 도가 벌어들인 외화 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취해 갔다. 각 단위와 기관들은 외화벌이를 통해 벌어들인 것을 일정 비율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 단위의 운영비로 충당하게 된 것이다.<sup>76</sup>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수

---

75. 통치자금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외화벌이가 그것의 중요한 경로가 된 것은 1974년 중앙당에 39호실을 만들면서라는 견해가 있다. 강명도, 위의 책, p. 181. 특히 1974년 2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 전원회의를 통해 김정일이 사실상 후계자로 결정되면서 권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통치자금과 외화벌이 사업이 필요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또 1972년 당에 '제2경제위원회'가 설치되면서 무기거래를 포함하는 군사물품의 교역을 당의 관리하에 두는 '당경제화'도 작용했다고 보는 의견이 있다. 특히 1970년대 중반까지 채무불이행으로 무역거래가 급감했지만, 1977~78년을 기점으로 무역거래액이 급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무라 미쓰히코는 이를 무기수출입액이 전체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기무라 미쓰히코, 정재정 옮김, 『북한의 경제: 기원·형성·붕괴』(서울: 해안, 2001), pp. 68-69. 이 밖에 1974년부터 본격화된 김일성의 우상화하는 대규모 상징물 건설과 1977년 김일성 65회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전국의 어린이, 학생들에게 교복과 당과류를 '당자금'으로 선물해 주는 등 이런 사업에 상당한 경비의 통치자금이 필요했다고 볼 수 있다. 홍민, 위의 논문, p. 365.

76. 가령 1991년 '새로운 무역체제'가 등장하면서 각 시·군은 도(道)와 긴밀한 협력하에

령경제로의 자금 및 자원의 흡수 폭을 확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외화벌이 경로의 양적 확대를 위해서 교역으로 팔 수 있는 국내 물자를 최대한 수령경제의 관리·통제 영역 안으로 끌어 들이고자 했다. 국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수령경제의 자금유입 체계에 끌어 들여 정권 유지와 재생산에 필요한 자금 경로로 활용하는 것이다.<sup>77</sup> 이것은 국내 생산이 열악하고 인민소비가 낙후된 속에서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수탈적인 성격을 갖는 수령경제로의 자원 집중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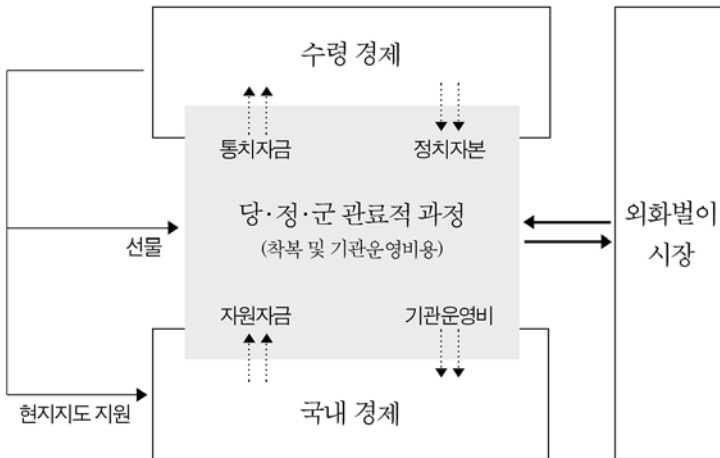
---

수출 원천을 스스로 찾아 외화를 벌여 지역 주민들의 ‘먹는 문제’와 ‘입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요구 받았다. 도 무역관리국의 은행계좌도 독립되었다. 중앙은 각 도가 벌어들인 외화수입 가운데 일정 부분을 수취해 갔다.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에 입각해서 네가 번 것은 너만 먹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 먹고살고 남는 것이 좀 있으면 나라에 바쳐라”라는 식이다. 양문수, “1990년대 경제위기와 지방경제 운영체계의 변화,” 최완규 엮음,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79-82; 신무역체계 아래서 외화벌이의 다양화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기구와 운영·개혁과 변화』(서울: 해남, 2002), pp. 30-31.

77. 북한은 해마다 주민들로부터 ‘충성의 외화벌이’ 명목으로 외화원천동원사업을 시켜 왔다. 각 지방의 당 기관들에는 39호실이 있는 데, 그 아래에 군중외화벌이사업소와 5호관리부를 두고 사금채취, 짐승피, 송이버섯 수집을 한다. 5호관리부의 경우 소속은 시·군당 소속이지만 중앙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 계획량은 금액지표로 할당되는데, 가령 1년에 10만 달러가 계획목표량이면 이것을 채우면 나머지는 그 사업소가 갖게 된다. 계획량을 채우기 위해 닥치는 대로 돈이 될 만한 것에 ‘달친다’고 한다. “요령 좋은 사람들은 송이버섯을 한 배당(7kg)씩 따오는데 국가에 팔면 북한돈으로 7~8백원(1994년 기준)을 받는다. 거간꾼에게 비싸게 팔려서 주민들이 송이버섯을 소금에 절여 숨기기도 한다. 안전원들이 송이버섯을 국가재산이라며 은닉자를 잡으러 다니는 것은 흔한 풍경이다. 김일성이 송이버섯을 가로채는 행위는 내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같다면 송이버섯의 국가관리를 강조했다고 한다.”(〈아·북녘동포〉 “외화벌이에 하루가 간다”(중앙일보 1995. 1. 24일자). 윤용씨(청진광산금속대학생 출신) 증언. “일단 일년치 10만 2천 달러 벌면, 10만 달러는 (계획량으로) 계산하고 2천 달러는 우리 사업소에서 먹는다. 그 돈으로 사업소에서 자동차를 사거나 나누어 줄 상품을 사기도 한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차에 대한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일의 평가는 몇 돈을 운반했느냐에 따라 양복지, 양복장, 이불장, 컬러TV 등 상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통일한국』 탈북자 쟁점대담. 배인수(평남 순천시 운산군 외화벌이사업소 운전수) 인터뷰 내용.

했다. 계획경제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은 개별 단위의 자체해결로 전가하고 수령경제는 정권의 자기보존과 특권화 된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상층 엘리트를 위해 약탈적으로 국내 경제에 균림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림 3-2〉 1990년대 이후 수령경제의 자금경로



이와 같은 구도에서 최고지도자와 상층 관료들 사이에는 수령경제로 유입되는 자원과 자금을 집행·관리·통제하는 속에서 특수한 교환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최고지도자는 이들에게 정치자본과 함께 외화벌이를 비롯한 각종 경제적 수취의 특권을 부여하고, 이들 관료들은 충성과 체제 보위라는 지지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하위 관료들 역시 물질적 상납과 정치자본 제공이라는 교환관계를 적극화했다. 이들에게 정치자본은 자기단위의 생존은 물론이고 시장교환의 중요 지점을 통제·관리하는 권한을 행사하면서 경제자본을 챙길 수 있는 특권을 의미했다. 수령을 비롯한 관료들 모두 자신의 정권 안위와 정치적 지위 보존, 물질적 이해를 위해 국내경제와 인민의 희생을 전제로 약탈적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의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78</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시장교환이 경제관계와 경제운용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하는 관료세계의 정치적 관계 역시 시장교환이란 질서를 적극적으로 전유해 내는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화 내지 시장교환 질서가 기존의 교환 질서나 체제를 침식하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제의 자체 생존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유될 수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현재 북한경제를 관료적 조정과 시장 조정의 이분법 속에서 어느 한쪽의 조종기제가 우월하다거나 이중구조로 보는 시각을 다른 시각에서 재음미 해 볼 것을 요구한다.

관료적 조정은 시장 조정과의 대립적·갈등적 체계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료적 조정이 특수한 이해관계를 담보하는 정치적 담합의 코드를 의미한다면, 시장적 조정은 그러한 특수한 이해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물질적 공급의 원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장교환이 호혜와 재분배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에 묻혀서 작동하고 있음을 뜻한다.

---

78. 과거 수령경제가 명목상이나마 인민을 포괄하는 '선물의 증여체계 차원에서 수령과 관료들 간의 특수한 이해를 위한 것이었다면, 1990년대 이후 수령경제는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령과 소수 특권화 된 관료집단만의 비도덕적 자기 생존 논리가 더 크게 부각되고 있다.

## (2)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화

### ① 1990년대 이전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북한 관료들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현상은 1990년대만의 현상은 아니다. 이미 과거부터 신분 상향이동의 원리, 관료들의 출세지향적 성향과 함께 계획경제의 문제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1990년대에는 시장교환을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 깊숙이 개입시킴으로써 좀 더 세속적인 모습으로 적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도덕적 포장(관료적 도덕담론) 속에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에 대응한 은밀한 공모의 형태를 띠었다면 지금은 생존 차원에서 시장교환과 적극적으로 결합한 양태를 띠고 있다.

우선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계획경제의 문제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회주의체제 관료들의 연줄망은 경제적 관점에서 비공식적 교환관계와 상호호혜의 관료적 공모관계를 의미했다. 관료사회의 응집은 유사-가족(quasi-familial)의 대면관계와 같이 개인적 이해로 시작해 단위의 이해를 대변하는 속에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그것은 단위들 간의 파편화 된 이해로 뭉쳐진 덩어리와 같았다. 이들의 상호호혜는 비공식적인 과정을 통한 경제적 재분배의 적절한 메커니즘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기관본위주의’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는 “당적, 국가적 입장을 떠나서 자기 기관, 기업소의 일시적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국가 계획과제 수행에서 기관, 기업소 호상간의 연계와 협조를 거부하거나 등한히 하며 협동생산에 잘 응하려 하지 않으며 자재와 설비를 사장해 두고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기관, 기업소에 넘겨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의〈공명〉과 〈명예〉, 〈출세〉를 위하여 다른 사람, 다른 기

관의 리익을 꺼리낌 없이 침범하는”<sup>79</sup> 것을 말한다. 즉 기관의 이해가 국가이익을 압도하는 것을 말한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계획의 불확실성에 직면해서 관료들은 합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비공식적 교환과 호혜적 연줄에 연루되고 개입하게 된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계획과제에 급급해 하는 ‘본위주의’로 비취지며 결과적으로 자기단위의 이해에만 맹목하는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나타난다.<sup>80</sup> 이런 의미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관료적 생존의 논리라고 할 수 있으며,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합법적 영역과 불법적 영역 양쪽에 묻혀 있다고 할 수 있다. 더 정확히는 개인화 된 공식 관계와 개인화 된 공적 역할 등을 기초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식 조직과 개인적 관계 사이를 연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개인적 역할과 사회적 역할, 사적 이해와 공적 기능 사이의 차이를 제거한다는 데 있다.

관료들의 행동이 공적인 선, 공적인 윤리와 같은 공적 관념의 사고를 부정하는 행동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는 사실상 부재하며, 오직 위계화 된 관료체계 내에서의 정치적 판단만이 그것을 정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토양이다. 그런 측면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역설적으로 사회주의사회의 ‘합리화 된’ 사회적 관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체제를 ‘거스르는’ 행위라기 보다는 강한 집단적 체제순응(conformism)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분

---

79.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pp. 119~120.

80. 북한에서 통제와 폐쇄성으로 인해 가족주의가 왜곡되어 ‘비도덕적 가족주의’적 요소가 되었다고 보는 시각으로는,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통일연구원, 1994), p. 23.

절화 된 각 단위 내의 생존을 위한 비도덕적 관료행위가 결과적으로 체제순응의 집합적 과정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개인을 심리학적으로 위안하고 체제에 대한 안정성을 보증하는 원천이 된다. 결국 체제가 유지되는 방식은 공식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의 관철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비도덕적 가족주의가 일상에서 하나의 실천성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1990년대 이후 현 시기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

관료세계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1990년대 변화된 경제상황 속에서 더욱 적극화되었다. 1990년대 관료들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관료들의 정치자본 획득전략과 활용방식, 그리고 주민 장터경제에서의 약탈적 기생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과거의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적게나마 공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자신이 속한 단위의 생산 목표량을 채우고 계획의 불확실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주로 ‘기관본위주의’ 차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1990년대에는 공급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자기단위의 살림살이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서 시장교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속에서 적극화되었다. 기존의 정치자본 획득에서는 수령과 상부에 대한 충성과 업무의 충실성, 출신성분 등이 중요했다. 1990년대부터는 충성 자체가 누더기가 된 계획의 틈새를 봉합하는 사업의 능력과 상납의 충실성으로 바뀌었다. 물론 1990년대 이전에 이미 정치자본이 관료세계에서는 다양한 자원을 흡수하고 전유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 관료들은 경험적으로 학습했다. 그것

은 정치자본을 중심으로 한 게임의 규칙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1990년대 변화된 현실에서도 정치자본을 이용해서 관료들이 쉽게 상황에 적응할 수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sup>81</sup>

관료들의 정치자본 활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주민들의 '장터경제'가 관료들이 정치자본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부상한 것이다. 특히 1996년 이후 관료들의 정치자본은 국가의 사적 경제활동에 대한 묵인과 함께 시장 통제정책에서 관리정책으로 변화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어 왔다. 관료적 지위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방식이 다양화되었고,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과 자원은 정치자본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상납금과 자기 단위의 운영비로 활용되었다.

이런 관료들의 기생 방식은 '마피아 부족주의'(Mafia-tribalism)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다. 마피아-기업 커넥션에서 발견되듯 관료들의 장터경제 기생은 지대추구(rent-seeking)뿐만 아니라 관료적 축적(accumulation)의 특정한 양식이 되었다. 관료들의 업무 성격에 따라 약탈적 기생의 방식도 다르다. 첫 번째는 공장 및 농장의 간부들, 두 번째는 당기관 소속 관료들, 세 번째는 각종 민생 관련 활동을 통제하는 치안 및 보안 관련 관료들과 요원들, 마지막으로 각종 운수 및 수송 관련 업종에서 종사하는 관료들과 요원들 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 차이에도 불구하고 약탈적 기생이 관료적 삶의 일상적 코드가 되었다는 점은 공통적이다.

---

81. Stephen Lovell, Alena V. Ledeneva & Andrei Rogachevskii (eds.), *Bribery and Blat in Russia Negotiating Reciprocity from the Middle Age to the 1990s* (London: Macmillan Press LTD, 2000), p. 8.

〈표 3-8〉 중하위 관료들의 정치자본을 통한 각종 뇌물 수수

뇌물 근거	뇌물 내용
직장결근	· 월 300원(일반노동자 월급 115원) - 한 달 출근하지 않아도 직장 '출근기록부'에 출근한 것으로 기록
통행증 (려행증)	· 200원~2,000원 - 신의주~회령 2,000원, 함흥~평양 1,200원, 함흥~국경 500원 정도 - 사회안전부에서 돈 있는 자를 찾아 통행증을 강매하는 사례도 있음.
평양이주	· 지방 주민도 4천 달러면 평양 이주 가능
중국방문	· 2천 달러면 언제든 가능
대학진학	· 북송자 자녀의 경우에도 500만엔이면 대학진학 가능
직장배치	· 500원(산업공장 300원, 대외봉사부문 1,000원)
입당	· 200달러면 입당 가능
보위부 신분증	· 100달러(1개월간 대여 가능)
무죄조치	· 절도범 700원, 살인범 2만엔 무죄처리
혼장수여	· 콩기름 10톤, 돼지고기 300kg 정도면 3급 국기훈장 수여 받음.
자동차 면허증	· 1,000원이면 2급 면허증 발급 가능(軍의 경우 600원)
대학졸업장	· 통신화부를 설치하고 있는 대학 학장들에게 승용차 1대 또는 대학운영에 필요한 5,000달러 가량의 석탄, 부식물 등 제공
군인신분증, 공민증 위조	· 신분증의 이름과 사진을 바꾸는 식으로 수 십 개의 위조증명서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암거래 등 경제범죄를 범함.
열차 단속	· 열차승무안전원과 단속간을 두고 단속, 불법여행자 등에게 담배 등 뇌물을 받고 묵인

관료적 이익은 자신의 공적 권력을 통해 ‘보호된’(protected) 시장이나 거래선들, 기업들, 사적 경제활동 등을 통해 조성된다. 이렇게 조성된 자금은 자신의 정치자본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상납금이나 뇌물로 쓰여 지거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사적 경제활동에 재투자된다. 다시 말해 시장교환을 부정적으로 전유하고 있는 것이다.<sup>82</sup>

특히 이들은 이런 사업적 이익을 통해 행정을 매수하고 공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며, 이런 힘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경제활동에 기생하며 ‘보호’의 대가로 약탈을 정당화한다. 이들은 공적 지위의 이면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다는 점에서 ‘그림자 사업가들’(shadow businessmen)이다. 이런 관료들의 행위는 사적인 ‘지대추구’ 행위의 맥락에서 볼 수 있으며, 소위 법을 집행·감독하는 자들의 행위란 점에서 ‘법안의 도둑들(thieves of law)’이라고 할 수 있다.<sup>83</sup>

이러한 관료들의 기생은 시장을 통한 물질적 재분배 역시 결과적으로 왜곡시킨다. 생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주민들의 시장교환에 관료들이 기생함으로써 생계 위협은 물론 빈부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주민들은 빈궁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장터 교환에 몰두하면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는 반면, 관료들이나 정치자본을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물장사꾼’들은 상대적으로 부를 축적할 기회를 갖는다. 결국 생계 이상의 이윤을 챙기고 소득을 재생산할 수 있었던 사람은 ‘자금과 정치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머지 장터를 ‘생계의 최종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은 ‘생계’선상에서 아사를 면할 수 있는 정도였다고 보면 정확하다.

82. 간부들이 직권을 이용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박형중,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pp. 38~40.

83. 이러한 ‘마피아 부족주의’와 시장교환이 갖는 관계를 비도덕적 가족주의로 설명하는 연구로는 밴필드(Edward Banfield)와 푸트남(Robert Putnam)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저발전의 도덕적 기초와 마피아나 마피아와 같은 권력관계의 도덕적 기초로서 비도덕적 가족주의를 주장한 바 있다. 개인적 의존의 후견주의적 고리들(clientelistic chains)로 결합된 이들은 자신과 조직의 이익에 맹목적이라는 점에서 가족주의적이면서, 조직의 이익을 위해 모든 공적 규율과 법적 체계를 무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이다. Edward C. Banfield, *The Moral Basis of a Backward Society* (New York: Free Press, 1958); Robert D. Putnam,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사실상 ‘비도덕적 가족주의’는 옳고 그름의 차원에서 부도덕한 행위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개인적 이해에 몰두하면서 사회적 관계를 개인화시키는 경향을 일컫는다. 따라서 현재 북한 관료들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비도덕적 가족주의 현상과 주민경제에 약탈적으로 기생하는 방식은 윤리적인 부도덕(immoral)의 차원보다는 북한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료적 삶의 방식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3. 현 시기 주민 경제생활과 시장교환

#### 1) 국가 통제변수와 시장교환의 관계

##### (1) 사회적 교환질서와 국가통제

‘시장교환’이란 결코 사회와 분리되어 독자적인 교환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호혜나 재분배와 같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른 지배적인 교환의 질서와도 함께 공존한다. 다만 시장교환이 일정하게 다른 교환질서를 압도하거나 우월한 형태로 사회를 압도할 수는 있다. 그것은 ‘시장’이 애초부터 사회에서 어떠한 독자성을 갖고 태어난 산물이 아니라 사회적 교환 형태의 다양한 유형과 결합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발달한 자본주의사회에서도 ‘시장교환’은 지배적일 수는 있지만 독자적이지 않다. 호혜와 재분배 같은 다른 교환 형식과 공존한다.

북한에서 제도로서의 시장이든, 장소로서의 시장이든 모든 시장교환의 성립에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동기와 배경, 변수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필요를 만들어 내는 사회



적 과정과 그것을 제약하는 사회적 요소들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속에서 가격신호가 만들어진다는 사실보다는 그러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에 개입하는 다양한 사회적 통제 변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통제변수는 그 사회의 지배질서가 시장을 수용하거나 시장에 대응하는 방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와 시장의 관계가 중요하다. 시장은 결코 국가를 떠나 성립하기 힘들다. 근대적 시장 시스템이 국민국가 발전과정과 그 틀 안에서 마련되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시장은 독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국가라는 일정한 정치적 영역 안에서 국가 또는 공동체의 필요와 제도화 수준에 따라 이와 갈등 또는 결합하면서 전개돼 왔다.

현재 북한에서의 시장 역시도 국가의 개입과 정치적 과정을 벗어나 존재할 수 없다. 또 역으로 북한에서 일정한 시장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법적·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사회적 관계의 도덕적 기대 역시 일정 부분 반영해야만 한다. 2002년 '7·1조치', 2003년 '종합시장' 허용은 그런 의미에서 시장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과 사회의 생계에 대한 도덕적 기대, 생산과 공급 부족의 현실 사이의 타협이라고 볼 수 있다.

## (2) 시장교환 '가격'의 사회적 맥락

계획경제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존재하던 시장교환이 생존의 수단으로 전면화 된 것은 1990년대 들어 와 식량난을 계기로 식량이 장터를 통해 교환되면서 가격이 급등하면서부터이다. 사실상 장터경제는 먹는 문제, 즉 식량의 개별적 확보 과정에서 형성된 교환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후부터 쌀값을 기준으로 기타 공산품과 생필품의 시장가격이 형성되면서 장터경제가 성립된 것이다.

이후 장터경제는 생존 차원을 넘어 일정하게 적극적인 시장행위를 통한 이윤과 자본이 만들어지는 장소가 되었다. 또 중국과의 교환관계가 활성화되면서 중국에서의 쌀값 변동이 내부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화교나 ‘돈주’들의 유통망 장악과 매점매석 등이 그러한 적극적인 행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 통합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해 공급과 수요에 따라 결정되는 형태라기보다는 다양한 국가 통제변수들의 개입과 기존 사회적 관계의 부정적 전유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그것은 추상적 차원의 ‘시장’ 기능보다는 생계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환에 대한 통제 수준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불안정한 ‘시장교환’의 질서라고 할 수 있다.

#### ① 쌀의 시장가격 통제변수

북한에서 시장교환의 ‘가격’은 쌀값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쌀이 기준이 되는 이유는 쌀이 ‘생계’ 수단으로서의 최종적 절박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장교환이 ‘생계’의 임계 압력(critical pressure) 선상에서 설정되거나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쌀값의 등락이 시장가격의 진폭과 민감도를 파악하는 기준이라면, 과연 쌀값은 어떠한 변수들의 영향아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84</sup>

---

84. 쌀값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우선 북한의 농작물 작황, 외부 지원식량의 수급, 중국 수입쌀의 유통, 교통난으로 인한 지역적 수급의 차이, 돈주들의 매점매석 등이 있다. 좋은벗들 편,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서울: 정토출판, 2006), p. 36.

첫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지원 및 각종 차관 형태의 식량공급이다. 1995년 공식적으로 북한이 구호를 요구함으로써 각종 경로를 통해 지원형태의 물자들이 식량을 중심으로 공급되어 왔다. 매해 부족한 식량 150~200만 톤 중 상당부분이 국제기구, 남한, 중국의 이러한 외부 지원을 통해 충당되어 왔다. 이러한 외부지원은 그러나 상당히 정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북미관계, 남북관계의 현안 문제에 따라 지원이 불규칙하거나 축소 또는 중단되어 왔기 때문이다. 한편 지원물자가 들어왔을 때 내부적인 과정 역시 중요하다. 분배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분배되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표 3-9) 외부 지원 식량 분배 순위

분배 순위	분배 대상	비율
1차 배정	인민무력부	30%
2차 배정	특수기관	10%
3차 배정	주요 공장·기업소	10%
4차 배정 <sup>85</sup>	각 시·군 양정사업소	50%

\*출처: (사)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서울: 정토출판, 2006), p. 18.

85. 4차 배정의 경우 각 시·군 양정사업소는 다시 배급순위를 나눈다. ① 국가적인 주요 공사를 돌격대, ② 10과 11과 대상사(백두산줄기: 항일혁명투사 가족·유자녀, 대남사업부문 가족들), ③ 사법·검찰 및 정권기관, ④ 철도부문 일꾼 및 호송원, ⑤ 일반 배급소 등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도부의 결정과 관료적 과정 통해 공식적·비 공식적으로 외부 지원식량이 시장으로 나가게 되는 경로이다. 공식적인 분배인 경우에는 군대를 비롯해 주민들에게 국정가격을 통해서나 배급을 통해 나가는 경우이다. 비공식적 경로는 상층 관료들부터 중하층 관료까지 분배과정이나 이동과정에서 쌀을 중간착복해서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이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들 지원식량이 시장으로 나오는 과정은 쌀값의 등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또 이러한 쌀값을 시기적 품귀를 이용한 관료들의 출하시기 담합이나 조정 역시 쌀의 시장교환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시장을 단속하는 국가 통제의 변수이다. 국가의 '단속' 여부와 강도에 따라 쌀의 시장가격이 등락할 수밖에 없었다. 또 한편으로 비 공식적으로 시장 단속을 명분으로 관료들이 착취해 가는 정도에 따라 가격이 영향을 받기도 했다. 어떤 탈북자의 경우 2002년 7·1조치 이후 시장은 "일하는 사람 30%, 단속하는 사람 70%"로 구성되어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일정하게 시장 행위가 불법이었지만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느슨한 형태의 통제를 해 왔다. 그러나 1998년 전후로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를 하기 시작했다.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투쟁이 단속의 근거였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시장교환에 몰두함으로써 농업 노동력이 유동하고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었다.

2002년 '7·1조치'와 2003년 종합시장 허용 조치를 통해 사실상 쌀의 시장교환이 합법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9월을 이후 쌀의 장마당 거래를 다시 통제하기 시작했다. 통제 이유는 추수시기에 협동농장에서 비공식적으로 개인과 농장 차원에서 쌀을 빼들려

시장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 년 중 쌀 값의 일정한 등락 시기<sup>86</sup>를 노린 매점매석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관료들의 시장 착취를 들 수 있다. 탈북자 면담에 따르면 최근까지도 주기적으로 각종 ‘비사’(비사회주의그루빠)가 내려와 시장을 검열하면서 트집을 잡아 각종 뇌물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 ‘비사’는 중앙에서 직접 내려오는 ‘중앙비사’, 도(道)에서 내려오는 ‘도비사’, 군(郡)에서 내려오는 ‘군비사’ 등을 비롯해 인민보안성, 국가안전보위부 등에서도 내려와 시장을 ‘들쭉서’ 놓고 각종 뇌물을 챙기고 있다고 한다.(탈북자 인터뷰)

그렇다면 2003년 이후에는 국가 통제 변수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시장 활동이 법화(法化)되면서 상대적인 통제의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력의 국가적 필요에 따라 시장 활동을 통제한다든가 추수 및 분배시기에 양곡의 시장 유출을 막기 위해 통제를 강화하는 등에 의해 일정하게 쌀값 등락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모내기, 김매기, 추수 시기에 농촌지역에 일손이 필요한 시기에는 시장 단속을 강하게 전개해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또 늦가을 추수가 끝나고 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 국가 수매분을 최대한 뽑아가기 위해 농장원들에 의한 양곡 유출을 막기 위해 시장을 최대한 억제하는 경우이다.

셋째, 국가의 계획 수매와 시장가격의 관계이다. 협동농장의 경우

---

86. 쌀값은 매년 대체로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6-7월 경 보릿고개 때 가장 많이 오른다. 그러나다 햇곡식이 나오는 8월 말부터 조금씩 내려가면서 11월에는 가장 낮아지고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한다.

국가 계획수매량은 농업 생산이 어려울 때도 정치적 과업 형태로 철저히 지켜져 왔다. 농장원들 분배 몫에서 떼더라도 계획수매량은 반드시 채워야 한다. 그것은 협동농장 관리들의 정치적 신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생산은 부족하고 목표량은 채워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편법들을 동원하게 된다. 가령 계획수매원에게 뇌물을 먹이고 수분도(水分度)를 높여 수매량을 줄여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료부족과 농기계 부족 등이 생산을 어렵게 하고 결국 계획수매량을 채우기 위해 농장원들의 분배 몫을 줄이게 된다.

예를 들어 350kg 정도가 현물분배로 농장원 한 명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계획수매를 채우기 위해 농장원들 분배 몫에서 빼고 나면 180~200kg 수준을 받는다. 적게 분배 받았기 때문에 분배 끝나고 다음 해 3-4월 정도가 되어 보릿고개가 오기 시작한다.<sup>87</sup>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들은 인근 농장이나 친인척에게 가서 빌려오게 된다. 북한에서는 이를 ‘가을농이’, ‘가을내기’, ‘고리대’ 등으로 부른다. 이렇게 되면 빌려온 만큼 다음 분배 때 그 부분을 공제해야 하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 이뤄진다. 결국 장마당에서 형성되는 쌀 가격이라는 것은 농장원 분배, 국가 수매와 연관돼 민감하게 작용한다. 수요와 공급을 통제하는 국가적 수취와 통제변수가 불규칙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다 중국의 쌀값 상승도 영향을 미치며, ‘돈주’의 매점매석을 통한 폭리에도 쌀값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87. 쌀값은 매년 대체로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6-7월 경 보릿고개 때 가장 많이 오른다. 그러나다 햇곡식이 나오는 8월 말부터 조금씩 내려가면서 11월에는 가장 낮아지고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한다.

## ② 전국적 통합 시장의 존재 여부

소위 말해 수요와 공급이라는 가격신호에 의해 움직이는 일정한 전국적인 통합시장이 형성돼 있느냐라는 문제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기준은, ① 지역의 지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정보유통 경로, ② 자유로운 물적 이동의 수송체계, ③ 일정한 가격 진폭을 따라 움직이는 전국의 시장가격, ④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와 지역적 '차별', 사회적 위계의 해소 여부 등이다.

우선 수송문제와 시장가격의 관계이다. 전반적으로 수송체계와 수단이 부실하다. 특히 동서를 연결하는 수송체계가 빈약하다. 따라서 크게 동서를 가르는 가격의 차이, 국경과 내륙을 가르는 가격의 차이가 일정하게 존재한다. 이런 수송문제로 인한 차이는 시장교환을 위한 이동의 경비를 상승시키기 때문에 지역간 시장가격의 차이를 확대시킨다. 수송이 불안하다는 것은 그만큼 이동의 위험성과 이동 중간에서 관료적 통제가 많아 뇌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88</sup> 따라서 동서의 가격 연쇄는 진폭이 느리게 지역을 거쳐 가고 동-서간에는 가격이 단절적인 측면을 갖는다. 전국적인 통합시장이 있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가 통제의 제약적 요소와 관료적 과정, 지역적 고립성 등을 중요하게 변수로 고려한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88. 북한에서는 1990년대부터 “빵통을 산다”라는 말이 나돌았다. 개인 또는 몇몇 사람들이 철도부에 의뢰하여 불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빵통(기차 화통 1량)을 빌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신의주나 나진선봉까지 빵통을 이동시켜 수입품이나 수출 물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한다. 빵통을 통째로 빌려 한 달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는데, 이 빵통을 빌린 화주는 물품을 수송할 때 반드시 빵통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화물을 지켜야 한다. 때로는 안전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빵통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에서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철도 일군이 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빵통을 습격해서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완전히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리만근 사진·안해룡 글, 『북녘 일상의 풍경』(서울: 현실문화연구, 2005), p. 152.

“1990년대부터 ‘빵통을 산다’라는 말이 나돌았다. 개인 또는 몇몇 사람들이 철도부에 의뢰하여 불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빵통(기차 화통 1량)을 빌리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신의주나 나진선봉까지 빵통을 이동시켜 수입품이나 수출 물자를 운반하는 데 사용한다. 빵통을 통째로 빌려 한 달에 일정액을 지불하고 이용하는데, 이 빵통을 빌린 화주는 물품을 수송할 때 반드시 빵통 위에 올라타서 자신의 화물을 지켜야 한다. 때로는 안전원을 고용하기도 한다. 빵통을 도난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역에서 도난당하는 경우도 있고, 철도 일꾼이 도난을 하는 경우도 있다. 심지어는 빵통을 습격해서 탈취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완전히 전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sup>89</sup>

“지역을 이동하며 되거리 장사를 한 탈북자들에 따르면, 지역간 이동에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될수록 원거리 이동을 통한 장사보다는 자신이 사는 지역 내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이윤을 많이 남긴다고 한다. 지역간 이동을 하는 장사의 경우 교통비, 안전원 뇌물, 장터 근처 체류비 등은 물론 교통체계의 열악함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가급적 소규모 상인들의 경우 피한다고 한다.”(탈북자 인터뷰)

또 북한 시장에서 거래되는 양의 70~90%를 차지하는 중국산 물품의 경우 국경을 넘는 과정에서 당·정·군 기관을 끼고 하는 대규모 유출입을 제외하면 대다수 보따리장수들의 경우 국가적 통제의 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들이 교환하는 물건의 가격에는 바로 이러한 국가 통제로 인한 위험 비용이 추가될 수밖에 없다. 국가 통제에 따른 공급 제약의 측면이 가격에 많은 부분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보 유통과 시장가격의 형성이다. 정보의 내용과 유통·전파 등에서 일정한 지역적 편차가 존재한다. 지역별로 약간씩 사회적 분위

---

89. 리만근 사진·안해룡 글, 『북녘 일상의 풍경』(서울: 현실문화연구, 2005), p. 152.



가 다르고 시장과 교환을 바라보는 시각과 활용 수준도 차이가 난다. 가령 함경남북도, 평안북도와 황해도에서의 시장교환과 시장 이용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난다. 가령 시장을 국가가 통제할 때 시장교환에 참여하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보호’하고 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지역<sup>90</sup>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안전원에게 고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지역이 있었다.<sup>91</sup>

한 탈북자는 평안북도에서 장사할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황해도의 경우는 확연하게 정서가 달랐다고 한다. 일명 ‘빵통’에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도 주민들이나 장사꾼들이나 알면서도 서로 묵인하고 그냥 있는데, 황해도에서는 주민들이 안전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전하고 있다. 황해도의 경우 국경을 넘어 장사를 한다는 자체를 아직도 놀랍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또 장사의 경우에도 보안원이 오면 미리 서로 알려주는 느슨한 체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황해도 내륙의 경우 달랐다고 한다.

---

90. 평안북도, 함경남도 출신 탈북자들의 경우 이런 묵계적인 ‘보호’를 자연스러운 정서로 받아들였다.

91. 한 탈북자는 평안북도에서 장사할 때만 해도 안 그랬는데 황해도의 경우는 확연하게 정서가 달랐다고 한다. 일명 ‘빵통’에 불법으로 물건을 들여오는 경우도 주민들이나 장사꾼들이나 알면서도 서로 묵인하고 그냥 있는데, 황해도에서는 주민들이 안전원에서 고발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랐다고 전하고 있다. 또 장사의 경우에도 보안원이 오면 미리 서로 알려주는 느슨한 체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었지만, 황해도 내륙의 경우 달랐다고 한다. 이런 점은 지역간에 발견되는 뚜렷한 경제심성과 통제수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생존이 다급했던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환세계는 일종의 지역 주민간의 의도하지 않은 ‘생계의 연대’를 만들었다. 생계활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대응, 즉 느슨하지만 친밀도 높은 보호의 정서적 공감대를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국가 통제에 대한 주민 정서는 철저하게 생계에 대한 그들의 분노를 함축하는 한편 서로 간에 이를 보호해 주는 심성을 만들었던 것이다. 반면 그나마 ‘먹고 살만 했던’ 황해도 지역은 그러한 정서적 공감대가 미약하다. 이들은 생계 차원의 교환세계를 아직도 불법적인 경제활동을 취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점은 지역간에 발견되는 뚜렷한 경제심성과 통제수용의 차이를 나타낸다. 생존이 다급했던 지역에서 만들어진 교환세계는 일종의 지역 주민간의 의도하지 않은 '생계의 연대'를 만들었다. 생계활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공동의 대응, 즉 느슨하지만 친밀도 높은 보호의 정서적 공감을 만들어냈다는 점이다.

지역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나 현실에 따라 정보의 내용과 유통, 수용에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정보 유통 자체가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며 예전보다는 많은 부분 활성화됐지만 아직도 지역적 한계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이 열려진 정보유통 속에서 자율적으로 가격신호를 발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현실에서 사회적 관계의 다양한 변수들이 개입하는 하나의 과정이란 측면에서 복잡한 사회적 관계에 '몰혀'있는 과정인 것이다.

셋째, 기존의 지역적 '차별', 사회적 위계를 통한 '차별' 등이 시장에서의 접근 기회와 시장교환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는가이다. 물론 시장접근 기회가 개방되어 있고 시장교환이 지역과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허용되고 일정하게 동일하다면, 그것은 통합된 전국시장의 중요한 조건과 배경이 될 것이다. 기존의 지역적 차별이나 사회적 위계가 그대로 시장접근 기회와 시장교환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친다면 시장교환이 온전히 통합된 전국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장세 부과를 통해 시장접근의 기회를 평준화하는 측면도 있다. '장세를 차등화하는 경우이다. 장세를 지역별, 상품품목별, 상품수량별로 약간씩 차이를 두는 것이다. 변방지역보다는 중앙지역일수록,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일수록, 시장의 규모가 작은 곳보다는 많은 곳일수록,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일수록, 공산품의 수량이 적은 매대보다는 많은 매대일수록 값이 더 높아지는 경향이다. 이는 북한이 공식적인

세금의 의미로 장세를 거두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경제를 허용하면서 사적 자본을 공적 자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의 성격을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장세의 지역적 차등화는 시장의 접근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오히려 수요가 많은 곳에서는 접근도를 제약하는 성격을 갖는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종합시장에서 고정 매대에 장사를 꾸리기 위해서는 보통 거액의 자본금이 필요한데, 2004년 기준으로 라진과 청진에서 100만원 정도가 들었다고 한다. 여기에 매일 뜨는 주, 달 단위로 장세를 내야한다. 장세는 품목 및 매대 위치에 따라 차등적으로 매겨진다. 또 국가가 금지하는 금지품목을 팔 경우 시장관리소 소장이나 관리인들에게 뇌물을 ‘고여야 한다.’(탈북자 면담)

또 한편 전국적으로 시장교환이 확대하고 전국적인 통합적 시장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이 단순히 시장접근 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사회적 분배의 개선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전국적 시장 개방 속에서 시장교환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이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지역간, 계층간의 빈부차가 확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북한에서 지역의 사회경제적 조건은 사회의 위계적 구조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 시장교환이라는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지만 그가 처한 공간적 차이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시장교환이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즉 ‘생존’ 차원에서 하는 시장교환과 이윤이나 자본 축적 차원에서 하는 시장교환의 사회적 의미가 다르며, ‘생존’을 체험하고 해소하는 방식이 지역적 위계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다.<sup>92</sup>

---

92. 인터뷰한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가격이 일정하게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전국적인 통

북한에서 시장교환이 수용되고 활용되는 지역적 편차와 차이가 있고, 특히 시장교환을 ‘생존’ 차원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한 달 수입 중 식량구입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사실상 모든 수입의 거의 전부를 식량구입으로 쓰고 있으며, 그것조차 안정적인 생계보장의 수준은 아니다.<sup>93</sup> 이윤으로 전환되는 장사의 개념이 아니라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장터의 교환 행위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이윤추구 행위로 시장교환이 전국적인 통합시장의 역동성으로 의미를 갖기 보다는 아직도 부족한 식량의 국내적 수급 정도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쌀값에 좌우되는 장터 교환에 머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 증식이나 이윤 극대화는 상대적으로 많은 자본과 관료적 보호망을 갖고 ‘시세 차이(arbitrage)’을 노리는 소수의 장사꾼에게만 의미를 갖는다. 결국 각 지역에 따라 아직 시장 접근기회가 차이가 나고 처한 지역의 생존 조건에서 시장을 활용하는 수준이 다르다면 통합된 전국적 통합시장 형성의 사회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기에는 미약하다.

### (3) 생산적 자본의 미성장과 ‘장터개인주의’ 심성

북한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유통영역이 과거에 비해 훨씬

---

합시장의 존재 여부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가령 함경북도 내에서도 군마다 경제조건이 많이 달라서 지역간 빈부차가 크고 시장 접근의 기회도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가격도 라진, 청진, 무산, 새별, 함흥 등이 모두 다르게 움직이며, 대체로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값이 비싸다고 한다. 국경지역의 경우 쌀 유입이 상대적으로 많아 쌀값이 싼 반면, 청진, 함흥, 원산 등 내륙으로 들어올수록 쌀값은 높고 공산품은 상대적으로 싸다고 한다.

93. 좋은 벗들 편,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위의 책, p. 43.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유통영역의 확대를 단순히 시장의 확대만으로 볼 수는 없다. 시장의 확대란 기본적으로 생산, 유통, 가격이 결합된 자가 발전적 구조가 요구된다. 생산이 정체되거나 미약해서 전체 경제의 동력으로 전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비공식적으로 중국이나 외부로부터 유입된 소상공의 분절화 된 유통 경로를 통한 소위 생존차원의 '되거리 유통'이나, 특정 지역시장 간의 교환을 통해 소폭의 중간 마진만을 챙기는 소상공인들의 시장 활동의 경우 '장터개인주의'(market-place individualist)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결과, 종합시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품목들은 70~90%가 중국산이다. 북한산의 경우 일부 곡물류나 남새류(채소), 신발(신의주), 피복류 등 극소수 품목만이 있다. 사실상 북한 내부 생산을 통해 시장으로 나오는 공산품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곡물의 경우에도 추수 직후를 제외하면 나오지 않는다. 남새류 역시 대체로 개인 텃밭에서 자체 소비될 뿐 시장으로 나올 여유분이 없는 실정이다. 신발이나 피복류의 경우도 관련 공장이 많은 신의주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북한에서 생산한 것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탈북자 인터뷰)

최소한 시장이 일정한 사회변화의 유의미한 형태를 띠려면, 일정한 생산물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시장을 통해 개인 간 정보의 개방과 가격의 신호로 유통되는 연쇄적인 교환체계가 전반적인 경제 질서를 지배해야만 가능하다. 즉 생산에 대한 자율적 결정과 생산을 하기 위한 공간의 자율적 성립이 필요하고 생산된 물건이 시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가격신호를 바탕으로 자율적으로 유통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생산을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제도적, 정치적 자율성이 부여되어야만 하고, 그것은 곧 생산-유통-소비-가격-생산으로 이어지는 순환 고리

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생산영역에서 국가와 분리된 독자적인 논리를 갖는 자본의 성장은 아직 목격되고 있지 못하다. 새로운 유형의 자본이 서서히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규모 상인자본, 고리대자본<sup>94</sup>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생산적 자본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대형 공장과 기업들은 여전히 국가 통제 하에 있다.<sup>95</sup> 일정한 자본의 형성 역시 국가적 또는 관료적 질서 안에서 허용된 극히 예외적인 사례들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은 자본축적의 주체가 갖는 정체성과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관료적 통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적극적 자본가를 기대하기도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자본’에 대한 물음은 소규모 가내 생산, 소규모 상인자본, 고리대자본을 넘어선 생산자본의 축적이 민간 영역에서 가능한가 하는 문제이

---

94. 고리대금업도 자신이 장사해서 번 돈으로도 하고 국가 것으로도 한다. 가령 전쟁예비물자 같은 식량창고를 관할하고 있다면 한 두 다리 건넌 장사꾼에게 쌀을 빌려 주어 쌀이 비쌀 때 판 뒤 가을에 채워두면 된다. 김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에서 온다면 도에 다 선이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 탈북자 쟁쟁대담(2002. 9). 이강일(지방 주권기관 근무) 인터뷰 내용.

95. 가령 ‘돈주’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평안남도 평성시는 전국적으로 돈주들이 제일 많은 곳에 속한다. 평균 10만 달러 이상을 소지한 돈주가 약 20~30명 가량 된다고 한다. 돈주들은 거의 90% 이상이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이다. 나머지는 되거리 장사를 크게 하는 장사꾼들이거나 해외에서 친척이 있어 지원을 받는 연고자들이다. 제도적 보장장치가 없기 때문에 돈주들 중에는 국가로부터 안전성을 보장받기 위해 막대한 양의 공채를 사거나 현금을 하기도 한다. 국가로부터 감사장이나 표창을 받으면 위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돈주들 사이에 기부금 경쟁이 불기도 한다고 한다. 큰 돈주들은 직접 나서지 않고 약 5~6명 가량의 대리인(중간상인)을 둔다. 이 때문에 돈주가 누구인지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북한 당국에서는 돈주들과 상인들의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경우 관망하다가 통제가 필요할 때 단속을 한다. 좋은 벗들 편, 『오늘의 북한, 북한의 내일』, 위의 책, p. 55. 이처럼 돈주들의 활동은 국가의 관료적 통제 안에서 생산적 자본을 만든다기보다는 유통마진을 통한 이윤을 챙기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 그것이 전적으로 국가의 통제와 관리 벗어나지 못하는 이상 변화 역시 국가 주도적인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소규모 주민 차원에서 이루어진 유통영역의 확대만을 가지고 시장이 자율적인 공간으로 확대되어 관료조정체계를 압도할 것이라던가, 폭발력을 가진 자동폭탄처럼 간주하는 것은 아직 이른다.

## 2) 핵심협 이후 정세와 시장 의존적 주민경제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변화 압력은 핵심협 전후의 정세를 포괄하는 1990년대부터 장기간 진행된 사회적 과정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계획-재분배체계가 붕괴됨에 따라 시장교환이 확대되었고 시장 의존적인 삶이 일반화되었다. 여기에 주민들의 경제심성 역시 시장 의존적인 삶에 맞게 변화였다. 당·정, 고위·말단을 막론하고 관료들은 시장교환을 통해 자신과 자신이 속한 단위의 보존에만 열중하는 한편 주민들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기생을 일상화하고 있다. 이 속에서 계층간, 지역간 빈부 격차가 점차 확대되었고 그럴수록 민심은 현정권과 지도자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다. 또 근 10년이 넘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 해체의 상처는 커져만 가고 있으며, 교육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체제의 근간이 될 후속세대의 교육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

이 모든 내용들은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연쇄적으로 얽혀 있어 체제 내구력을 침식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만약 2·13합의를 통한 외교적 해결이 난관에 부딪치고 체제 고립과 내핍이 계속 될 경우 이들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체제의 위기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중장기적이란 시간적 길이는 국제사회의 제재가 재개되고 북미관계가

극단적으로 다시 악화되는 것을 고려했을 때이다. 이런 상황이 전개될 경우 북한에서 핵은 단기적으로 외부세력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을 자극할 수 있는 상징이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핵문제로 인한 고립의 피로감으로 인해 체제에 대한 불신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말하는 외부세력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란 것도 체제에 대한 신뢰나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기보다는 제국주의나 기타 외부세력에 대한 적대적 학습의 결과 상대적으로 획득된 정서에 기반 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체제에 대한 불신이 최소한 체제에 대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버릴 만큼 크지 않다는 추측 하에서 그렇다.

그러나 2·13합의가 계획된 일정을 따라 이행되고 최소한의 신뢰기반이 구축된다면 다른 전망이 가능해진다. 중단기적으로 외부 지원이 들어오고 적대적 조치들이 해소될 경우 북한체제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체제에 대한 도덕적 신뢰가 일정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자본의 유입과 경제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점진적·부분적 개방을 통해 안정적인 체제 정상화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과정까지 진척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선택과 복잡한 대외적인 사안과 마주쳐야만 한다. 가령 정상국가로 가는 길에서는 체제의 폐쇄적인 자세보다 투명성이 무엇보다도 요구될 것이다. 여기에는 민주화, 인권, 개방의 문제가 함께 할 것이다. 또 대내적으로 북한사회가 지금까지 변화되어 온 속도만큼 사회가 요구하고 욕망하는 기대의 수준과 부피도 커질 것이다. 결국 대외적인 투명성의 요구와 대내적인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북한체제가 어떻게 지혜를 발휘할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핵’을 중심에 놓고 이루어지는 이해관계는 항상 기회의 한편으로 위기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



결론

# 위기와 도전, 북한 경제의 향방





결론

⋮

## 위기와 도전, 북한 경제의 향방

### 1. 위기와 도전 속의 북한 경제

2006년 북핵 실험 이후, 그리고 2007년 신년공동사설 이후 북한의 지도부가 인민생활 향상을 외쳤던 것은,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국제사회의 지원 급감, 북한 경제난 가중 상황에서 주민들의 동요와 불안을 미연에 막고, 저항을 예방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레토릭 일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인민생활 향상이 국가의 전략인 ‘군수공업’, ‘중공업’, ‘선군정치’를 우선시하는 정책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현 시기 북한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하부 토대가 시장경제로 완전히 전환한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결의와 의지를 필요로 한다. ‘생산 없는’ 시장경제, ‘제도 불비’의 시장경제, ‘외부에 취약한’ 시장경제, 그리고 ‘유통 중심의’ 시장

경제를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가 생산을 지원 하는 시스템을 창출해야만 한다. 생산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며 국가가 보호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들의 성공은 북한 시장경제에 ‘생산’의 영역을 창출하게 한다. 또한 생산을 주체적으로 담당할 생산자들을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각종 시장경제적 제도를 창출하고 정비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2007년 신년사에서 언급했듯이 국가는 ‘자력 경쟁’을 북한 사회에 강요하였다.

7·1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의 특징은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의 ‘이중화 전략이 낳은 구체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큰 틀에서 계획적 운용과 시장적 운용이 있겠지만, 가격의 측면에서는 국정 가격(배급과 배분)과 시장 가격(시장 거래), 환율에서는 공식 환율과 시장 환율, 결제 양식에서도 무현금결제와 현금결제, 나아가 특구와 비특구 등이 그것이다.<sup>96</sup> 이러한 이중성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이 궁극적으로 계획경제의 재건을 추구하는 것이지만 경제난으로 시장경제를 용인할 수밖에 없는 북한 국가의 고민이 반영된 것이다.

물론 북한 측 경제학자에 따르면, 북한의 자유 거래에 의한 경제 시장에 대한 입장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것으로 중국, 베트남이 실시하는 경제개방의 북한판으로는 생각지 않고, 단 2020-2025년까지는 자유시장의 형태로 열릴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sup>97</sup>고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시장경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이 북한 경제의 현주소이다.

현재 북한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전제적인 북한 국가의 퇴출 혹은 체제 붕괴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무지의 소산이다. 사실

---

96. 배종렬, “북한개발을 위한 중장기적 금융시스템 구축방향”(2006년 8월 4일).

97. 주간 이코노미스트, 앞의 글

북한의 시장경제화로의 전화는 북한 국가의 자유방임국가로의 전화를 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시장경제의 상부구조를 창출하는데는 국가의 사회 장악력과 정책 능력이 더욱 요구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sup>98</sup> 하지만 현재까지 북한 국가는 그러한 능력을 다른 곳에만 투입했으며, 그 결과 이제는 오히려 시장경제를 불러오는데 ‘유약한 국가’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역설이 존재한다는 것이 북한 경제의 ‘표류하는 좌표’이다.

현재 북핵 문제 해결을 핵심 사안으로 했던 6자 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북한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현재 북한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경제와 사회의 개방성을 창출하기보다는 계획 경제의 고답적인 재건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새로운 도전 속에서 북한 경제는 대외 환경의 개선(대북 경제지원의 재개, 외국과의 관계개선 등), 대북 경제재제의 단계적으로 해제, 개발협력 및 남북 경협을의 계속적 추진, 중국 등으로부터의 외자유치 등의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 기회가 찾아 왔다면, 시장경제를 타고 가야 한다. 인민이 욕구하는 바를 따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 현 시기 북한에서는 ‘진보’이다.

## 2. 북한 주민 생활의 전망

1990년대 계획-재분배체계의 붕괴 이후 시장화는 주민 생존 차원에서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2000년대 들어서는 사회 전반에 확대된

---

98. 일반적으로 시장자본주의 초기의 자유방임국가는 야경국가로 치부하지만 야경국가는 없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야경국가로는 시장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없기 때문에 강력한 국가개입이 존재했다고 보아야 한다.

시장교환을 제도적·법적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조치들'이 실시되었다. 이제 사실상 시장교환은 국가의 경제운영은 물론 주민 경제생활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만큼 시장질서가 갖는 사회적 압력이 더 이상 퇴행적인 '계획경제'로의 회귀를 용납하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주민들의 물질적인 생활수단에 대한 욕구가 많아진 것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경제 관념과 심성의 광범위한 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 시기 국가의 경제운영 역시 사실상 시장을 경유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한 특권화된 계층의 경우 중앙으로 이전되는 생산물과 자원을 대외교역이라는 시장교환을 통해 자금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재분배의 능력이 회복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중하위 관료들 역시 자신의 관료적 지위를 유지하고, 자기단위의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교환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공장 및 농장의 각종 자재 및 농기구, 비료 등을 마련하는 기본 통로가 공식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말단 관료들의 경우 주민들의 시장교환에 약탈적으로 기생하며 시장을 자신들의 사적 수취의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민들 역시 생존 차원에서부터 적극적인 이윤추구까지 다양한 목적을 지니고 시장교환에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국가의 공식적인 경제운영은 물론 모든 단위와 계층에서 시장교환이 행위와 사고의 중심이 된 것이다. 이것은 1990년대 이후 거의 15년 간 이루어진 변화로서 사실상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변화라고 볼 수 있다.

현 시기 북한 경제운영에서 시장이 갖는 의미를 인민경제와의 관계 차원에서 정리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대외적인 문제가 일정 부분 해결됨으로써 국가의 주민에 대한 재분배 능력이 지금보다

향상되더라도 사회에 확대된 시장교환의 질서를 돌이키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외부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시장교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의 회귀는 힘들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시장교환을 관리하는 정책을 보다 구체화하고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과거와 같은 국가의 배급 중심적인 인민경제 통제와 운영보다는 시장교환과 인민경제 운영을 적절하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타협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국가 통제 안에서 관리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이것은 국가 생산부문을 정상화하고 낙후된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재정비 해 나가는 장기적인 계획이 안정화 되는 시점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장교환의 확대로 인해 자연스럽게 많아진 사회의 일탈적 현상들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도덕적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기준과 제도적 틀로 수용할 수 없는 사회경제적 활동의 영역이 확대된 만큼 이를 일정하게 '민심'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수용할 수 있게끔 제도를 조정하고 수정하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자발적 시장화의 속도와 사회적 변화 속도 등에 따라가지 못하는 국가의 법적·제도적 대응력이 현재는 물론 향후 경제민심을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주로 시장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아닌 정당한 시장교환을 방해하는 행위나 관행을 다양한 법적 체계를 통해 교통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적 조정은 중단기적으로는 시장 질서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데에 목표를 둘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변수는 시장화를 통해 발생하는 지역 간, 계층 간 빈부격차이다. 이 문제는 당분간 국가적 수준에서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주민들의 '민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